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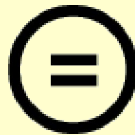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논문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과 적대적  
매체 지각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목 은 영



# 국문 초록

##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과 적대적 매체 지각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지금까지 언론의 공정성 연구에서 등한시되어온 이용자 관점에서의 공정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뉴스 이용자들이 실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공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학자들이 제시해왔던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들이 이용자들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를 기반으로 하여 뉴스매체에 대한 사전태도가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반영’, ‘관점 균형성’의 세 가지 공정성 구성요인을 도출하였고, 이에 매체 요인을 추가하여 2(정보원 다양성: 강 vs. 약) x 2(이해당사자 반영: 유 vs. 무) x 2(관점 균형성: 유 vs. 무) x 2(매체: 조선일보 vs. 한겨레신문) 요인설계를 적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의 주제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정치폭로와 관련된 기사에서는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입시논란과 사회고발을 다룬 기사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정치 관련 기사에서만 다양한 정보원이 등장한 뉴스,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뉴스, 관점이 균형적

인 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들보다 해당 기사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둘째, 세 가지 공정성 구성요인 중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보원 다양성이었고, 그 다음으로 관점 균형성, 이해당사자 반영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셋째,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에 따라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해당 매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은 인지차원의 태도, 감정차원의 태도, 정보원 다양성, 관점 균형성, 주제 관련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은 인지차원의 태도와 주제 관련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구성요인과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 중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였다.

주요어: 언론의 공정성,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반영, 관점 균형성,  
적대적 매체 지각,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

학 번: 2010-23003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문헌연구 .....	4
제 1 절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 .....	4
1. 공정성 개념에 대한 연구 .....	4
2. 공정성 연구의 다변화 .....	16
3. 이용자 관점에서의 공정성 논의 .....	20
4. 뉴스 텍스트 차원에서 공정성의 의미 .....	26
제 2 절 적대적 매체 지각 .....	34
제 3 장 연구방법 .....	44
제 1 절 실험방법 .....	44
1. 실험설계 .....	44
2. 피험자 모집 및 실험절차 .....	45
제 2 절 실험처치 .....	46
제 3 절 변인측정 .....	49
1. 공정성 .....	49
2.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 .....	50
3. 주제관여도 .....	53
제 4 장 연구결과 .....	54
제 1 절 조작화검증 .....	54
제 2 절 피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5
제 3 절 실험집단별 공정성 평가 .....	58
제 4 절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	60

1.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	60
2.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구성요인 .....	65
3.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에 따른 공정성 평가 요인 .....	65
4. 공정성 구성요인과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 중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8
<b>제 5 장 결론 및 논의 .....</b>	<b>72</b>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72
제 2 절 연구결과의 함의 .....	74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79
<b>참고문헌 .....</b>	<b>81</b>
<b>부록1: 실험처치물 .....</b>	<b>87</b>
<b>부록2: 설문내용 .....</b>	<b>111</b>
<b>Abstract .....</b>	<b>116</b>

## 표 목차

<표 1>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에 따른 실험설계 .....	44
<표 2> 뉴스 공정성의 평가지표 .....	50
<표 3>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조작화 검증) .....	55
<표 4> 피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6
<표 5>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 .....	57
<표 6> <기사 A>에 대한 실험집단별 공정성 평가 .....	58
<표 7> <기사 B>에 대한 실험집단별 공정성 평가 .....	59
<표 8> <기사 C>에 대한 실험집단별 공정성 평가 .....	59
<표 9> <기사 A>: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	62
<표10> <기사 B>: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	63
<표11> <기사 C>: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	64
<표12> 매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의 공정성 평가 요인 .....	67
<표13> 매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의 공정성 평가 요인 .....	67
<표14> <기사 A>: 공정성 평가에 대한 위계적 회귀모형 .....	69
<표15> <기사 B>: 공정성 평가에 대한 위계적 회귀모형 .....	70
<표16> <기사 C>: 공정성 평가에 대한 위계적 회귀모형 .....	71

## 그림 목차

<그림1> 웨스터슈탈의 객관성 모형 .....	5
<그림2> 강명구의 뉴스 공정성 모형 .....	8
<그림3> 이민웅의 공정성 모형 .....	9
<그림4> 실험처치용 기사 이미지 .....	48



# 제 1 장 서론

우리는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언론에게 공정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의 공정성은 언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상성(理想性) 중 하나로 받아들여져 왔고, ‘언론이 공정해야 한다’는 명제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공리(公理)로 여겨진다.

하지만 정작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언론학자들은 공정성을 논할 때 그에 따른 하위 개념인 사실성, 다양성, 균형성, 불편부당성 등 다양한 개념을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언론학자마다, 그리고 언론인들마다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대통령 탄핵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대대적인 논란이 있는 후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뉴스 연구에서는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쓰여 왔지만, 외국에서는 오히려 다른 개념들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는 언론의 ‘객관성’(objectivity), 영국의 경우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언론을 평가해 왔는데,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각국의 언론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역사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 속에서 자생한 것이며, 서구의 객관성이나 불편부당성과 같은 개념으로 대치될 수 없다. 이는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이고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영역임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언론의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공정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뉴스 이용자는 자신들이 견지하고 있는 공정성 기준에 따라 해당 보도를 비판하지만, 정작 언론사나 기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보도가 공정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김연식, 2009). 그러나 언론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 비해, 뉴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관점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하다. 공정성에 대해 언론학자들과 뉴스 생산자들 간의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으나, 그들끼리의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뉴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인식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합의점이 진정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성 논의에 있어 이용자들의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한,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공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용자 관점에서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들의 타당도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검토하거나(이민웅·이창근·김광수, 1993),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공정 보도사례를 직접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문종대·안차수·진현승·안순태, 2007), 실제 뉴스 이용자들이 언론보도를 접할 때 어떠한 뉴스를 공정하다고 평가하는지, 어떤 요소가 공정성 평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뉴스보도 방식에 따라서 뉴스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가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동일한 보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

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들이 언론보도를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이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인들의 언론보도에 대한 편향지각(biased perception)은 적대적 매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적대적 매체 지각의 원인으로, 이슈에 대한 찬반 입장 및 관여도(involvement), 매체에 대한 사전 태도 등이 밝혀졌으나, 본 연구는 개인이 언론매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전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 언론 환경의 특성 때문인데, 보수 대 진보, 친정부 대 반정부 등 양자대립 구조로 일관된 언론 환경에서 이용자들 또한 그들의 성향에 따라 우호적인 매체와 적대적인 매체를 구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의 영향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오택섭·박성희, 2005; 황치성, 2007). 만약 뉴스의 구성요소보다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가 뉴스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언론의 정파성을 비판하는 이용자들 또한 자신들이 언론의 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편파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뉴스 이용자들이 실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공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특정 매체에 대한 사전 태도가 공정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공정성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이용자들의 특정 매체에 대한 사전 태도가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공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제 2 장 문헌 연구

### 제 1 절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크게 공정성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와 내용분석을 통한 실제 뉴스보도의 공정성 검증으로 나뉘볼 수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는 선거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 또한 공정성 개념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하위개념들을 분석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성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가 공정성 관련 연구에서 중심축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초기의 연구들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들에 대한 탐색이 주를 이룬다면, 이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공정성 논의의 재개념화, 공정성 요구의 원인 탐색, 수용자로의 관점 전환 등으로 다변화 되어왔다(최민재 · 김재영, 2008).<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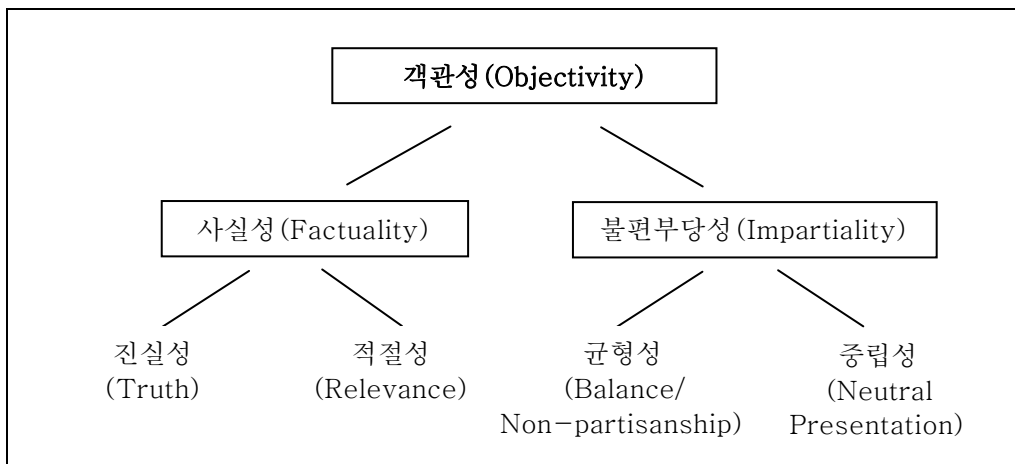
#### 1. 공정성 개념에 대한 연구

공정성 개념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고 널리 인용되어온 것은 스웨덴 학자인 웨스터슈탈(Westerstahl)의 객관성(objectivity) 모델이다. 웨스터슈탈(Westerstahl, 1983)은 스웨덴 공영방송의 공정성 수행

---

<sup>1</sup> 최민재 · 김재영(2008)은 전통적 선거방식이 쇠퇴하고 미디어 중심의 선거가 본격화된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정성 개념의 초석을 세운 연구들이 등장했으며, 그 후 한참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4년의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다시 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객관성 개념을 여러 하위개념들로 분류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그는 객관성을 사실성(factuality)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으로 구분하고, 다시 사실성은 진실성(truth)과 적절성(relevance)으로, 불편부당성은 균형성(balance/ non-partisanship)과 중립성(neutral presentation)으로 세분하였다. 진실성은 뉴스 보도가 사건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의 문제로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사건을 보도하였는지와 관련되며, 적절성은 뉴스보도에서 관련된 사안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부각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정 과정은 어떠했는지와 같은 뉴스 선택에 관련된 개념이다. 그리고 균형성은 갈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양적 및 질적으로 균등하게 보도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각 당사자들에게 할애된 시간 또는 지면의 양,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제시 여부와 더불어 각 당사자들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기자가 각 당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도하였는지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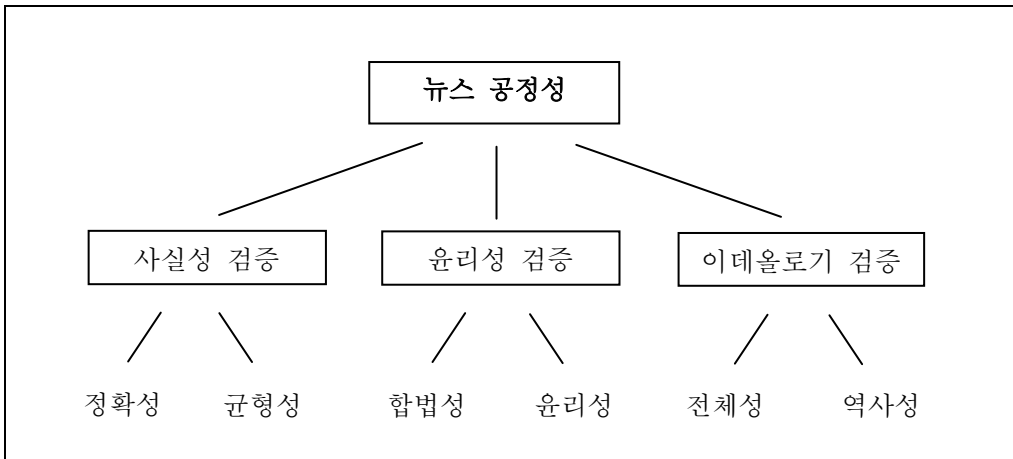
<그림1> 웨스터슈탈의 객관성 모형

웨스터슈탈의 모델은 유사개념 상호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지만(이민웅 외, 1993), 언론조직의 내적 요인(기자의 전문직주의, 언론구조의 이윤추구 목표, 기자들간의 경쟁 등)과 언론의 외적 요인들(국가, 자본, 이익단체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여 객관성을 뉴스의 필요충분조건으로 확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강명구, 1989). 맥퀘일(McQuail, 1986) 또한 웨스터슈탈의 객관성 모델이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보도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적합할지 모르나, 저널리즘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불완전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맥퀘일(McQuail, 1986)은 웨스터슈탈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에 주목하며, 뉴스 내용(content)뿐만 아니라 뉴스 생산과정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뉴스 행위(performance)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객관적 뉴스와 비객관적 뉴스가 공존함을 주장하면서, 그의 모델에 필연성(necessity)과 독립성(independence)의 차원을 추가하였다. 먼저 필연성의 측면에서는, 경제적·조직적·기술적 요인 등 뉴스 생산과정에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요인들로 인해 현실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하는 객관적인 보도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불가피한 제약들에 적응하기 위한 기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객관적인 뉴스라는 것이다. 한편 독립성의 측면에서는 언론은 사실과 해설기사와 같이 객관성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뉴스 행위에서 객관성을 필연적 요인으로 보았으며 그 하위개념으로 사실성(factuality)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객관적 요인으로는 당파성(partisanship), 선전(propaganda), 주관성(subjectivity) 또는 선택성(selectivity)을 제시하였다.

맥케일의 틀이 객관성의 사회학적 내지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보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진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이민웅 외, 1993), 이는 객관보도와 비객관보도의 유형을 전혀 다른 범주로 구분함으로써 사실규명의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뉴스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뉴스 선택과정에서 뉴스 생산자들의 윤리적 차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강명구, 1989).

강명구(1989)는 웨스터슈탈과 맥케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언론의 사회적 문맥을 고려하여 뉴스의 공정성 개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는 뉴스 공정성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심축을 인식론적 타당성, 윤리적 정당성,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의 세 가지 차원으로 보고, 사실성 검증, 윤리성 검증, 이데올로기 검증으로 구성된 공정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사실성은 정확성과 균형성, 윤리성은 합법성과 윤리성, 이데올로기는 전체성과 역사성으로 세분되는데, 사실성은 “인식된 현실로서 뉴스는 현실을 정확하고 균형되게 인식해야 된다는 뜻에서 과정적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언어적 형식” (40쪽)으로, 이를 판단하는 불변의 보편적 판단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의 과정에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윤리적 정당성은 취재과정에서 기자와 언론사의 내적 판단과 연관된 개념이고,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은 불평등한 사회관계와 삶의 조건의 변화를 지향 하는가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성은 하나의 사건을 사회과정에 위치 지어 구조적 조건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역사성은 사건을 시간적 지속 안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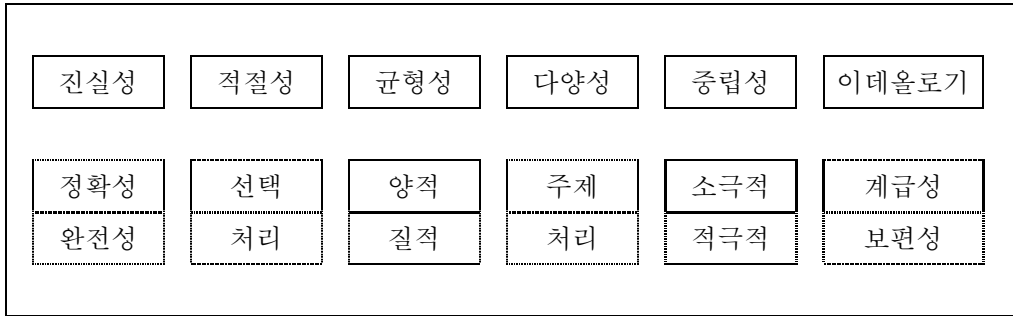


<그림2> 강명구의 뉴스 공정성 모형

이민웅 외(1993)도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 및 합의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주목하며 공정성 개념의 구성요인과 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민웅(1996)은 공정성의 새로운 모델에서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다양성, 중립성, 이데올로기의 6개 차원을 제시하였다. 진실성은 사실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완전성까지 고려하며, 적절성은 어떤 이슈가 보도되는지에 관한 기사의 선택과정과 함께 보도 내용이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관한 처리과정에도 적용된다. 균형성은 양적인 균형과 질적인 균형을 모두 포함하며, 다양성은 보도의 주제가 되는 이슈가 다양한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주제 측면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처리 측면을 모두 의미한다. 그리고 중립성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는 소극적 중립성은 양쪽이 모두 진실 아니면 허위라는 양시양비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되 충실한 취재를 통해 진실에 입각하여 판단을 내리는 적극적인 중립성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



의 견해와 일반국민의 견해가 일치하는 정도, 지배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와 의견이 누락되는 정도 등의 계급성과 보편성을 고려한다.



<그림 3> 이민웅의 공정성 모형

이처럼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웨스터슈탈과 맥케일 등 서구 학자들의 객관성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공정성(fairness) 개념이 뚜렷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서구에서 ‘언론의 객관성’의 사회적 의미<sup>2</sup>를 생각해볼 때 그들에게 있어 객관성은 우리에게 공정성과 같은 개념일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김민환 외(2008)는 웨스터슈탈의 모델이 그 방면의 선구적인 개념화 작업일 뿐 아니라, 그가 제시한 하위개념들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당사자들에 의해 공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모델이 공정성 논의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공정성을 논함에 있어 서구 학자들이 제시한 객관성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론의 공정성은 서구 개념의 직접적 번역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자생한 개념이

<sup>2</sup> 미국의 언론인들은 객관적 보도를 현존하는 업무 관행인 동시에 높은 도덕적 사명으로 여기며, 미국기자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의 윤리규정에서 ‘객관성’은 오랜 기간 동안 핵심 원칙이었다(Bennet, 2009).

기 때문이다(임태섭, 1993). 즉, 언론의 주요 이념과 가치들은 그 사회의 제반 여건과 무관하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경험이 축적되어 형성된 구성물이다(유종원, 1995; 이민웅 외, 1993, 2006; 이준웅, 2005, 2008; 최영재, 2004). 김민환 외(2008)는 외국의 공정성 개념과 관련 제도들은 그 나라의 방송체제의 특징과 국가체제의 특성, 그리고 방송을 둘러싼 역사적 경험과 전통, 이 세 가지 요인이 상호 변증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서구의 객관성 모델을 통해 공정성 개념을 논의한 기존 연구들에서 왜 학자들이 객관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만,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극히 일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 언급 없이 서구의 객관성 모델로부터 우리의 공정성 개념을 도출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객관성 개념부터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언론의 객관성’ (objectivity in journalism)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된 규범·의식·전략으로, 일반적인 ‘객관성’ (objectivity)과는 다른 개념이다(이준웅, 2005). 미국 사회에서 객관주의 보도는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배적인 저널리즘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그 동안 논리실증주의의 확산, 전신기술의 발달, 대중신문의 등장과 뉴스 매체의 산업화, 언론인들의 전문직화 등 미국 사회의 다양한 여건들이 모두 결합된 역사적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민웅 외, 1993, 2006; Schudson, 2001). 그 중에서도 이민웅 외(1993)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확립을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권자인 시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은 정확하고

편견 없이 보도해야 한다는 당위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뉴스의 공정성 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오랜 기간 동안 언론을 조정하였던 권위적 통치행태와 언론의 체제 순응적 관행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신감을 지적한다. 즉, 일찍부터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던 서구 사회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집권 세력에 의해 권력이 임의적으로 행사되어왔고 언론의 불공정성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뉴스의 공정성은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민웅 외, 1993).

국내 학자들은 ‘언론의 공정성’을 ‘언론의 객관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최영재(2004)는 주관적인 보도를 통해서도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도의 객관성의 하위개념들은 그 자체로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요소가 된다고보다는 그 같은 객관성 요소들을 이용하는 언론의 윤리적 결단에 의해서만이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 이민웅 외(1993)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집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논설이나 논평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파악에 입각한다면 이는 ‘공정한 논평’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객관적인 논평’은 없지만 ‘공정한 논평’은 존재하므로, 공정성을 객관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베넷(Bennet, 2009)은 최근 들어 미국 언론인들이 보도 지침을 설정할 때 ‘객관성’이라는 단어 대신 ‘정확성’(accuracy), ‘공정성’(fairness), ‘균형’(balance), ‘진실’(truth)과 같은 단어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러한 개념들이 객관성보다 달성하기 수월하기 때문이지 원래 객관적 보도라 일컫던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 지적한다. 이처럼 국내 학자들과 외국 학자들은 언론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 언론의 공정성(fairness)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9년에 만들어져 1987년에 폐기된 미국의 ‘공정성 원칙’ (fairness doctrine)<sup>3</sup>은 방송사가 공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방송해야 하고, 공적 중요성이 있는 논쟁(controversial issues of public importance)을 방송할 때에는 그 이슈에 대해 대립되는 의견들을 균형 있게 보도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강남준·김수영, 2008; Krattenmaker & Powe, 1985). 이 규제정책의 내용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공정성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후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미국 학계의 연구(Lacy, Fico & Simon, 1991)에서는, 대립되는 입장을 대변하는 정보원들이 모두 보도에 포함되었는지, 만약 어느 한 쪽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접촉을 시도했으나 정보원이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등 양쪽의 정보원들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1996년 대통령 선거보도를 분석한 피코와 코트(Fico & Cote, 1999)도 두 후보자를 지원하는 정보원들의 주장이 모두 포함되었는지를 통해 이를 판단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불편부당성’ (impartiality)이 방송저널리즘의 핵심 개념으로 작용해왔다. BBC는 영국의 의회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공영방송이 논쟁적 사안에 대해 특정 정파를 편드는 것을 막기 위해 논쟁적 사안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였으나, 이후 소수의견이라도 정당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조절적 균형 전략을 받아들임으로써 지금의 ‘적절한 불편부당성’ (due impartiality)을 지도적인 이념으로 채택하였다(이준웅, 2005). 적절한 불편부당성은 절대적인 중립성을 유지하거나 모든 입

---

<sup>3</sup> ‘fairness doctrine’ 은 ‘공정성 원칙’, ‘형평성 원칙’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개념에 대한 논의의 진행을 위해 ‘공정성 원칙’ 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장마다 수학적으로 똑 같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견해들을 적절하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BBC, 2010). BBC는 ‘시소에서 수레바퀴로’ (from seesaw to wagon wheel)<sup>4</sup> 라는 보고서에서 정확성(accuracy), 균형성(balance), 맥락(context), 거리두기(distance), 공평성(evenhandedness),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개방적 자세(open-mindedness), 엄격성(rigour), 자의식(self-awareness), 투명성(transparency), 진실성(truth)을 제시하며, 이 중 어떤 개념도 불편부당성과 바꿔 쓸 수 없지만 이 모든 개념들은 불편부당성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명시하고 있다(BBC, 2007). 즉, 영국에서는 ‘불편부당성’이 ‘공정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BBC는 ‘닐 보고서’ (The Neil Report)와 ‘편집 가이드라인’ (Editorial Guideline)<sup>5</sup>에서도 공정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출연자나 기고자 그리고 시청자를 정당하게 대하는 것이 이 개념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출연자나 기고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동의를 얻어 방송하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allegation)을 보도할 때에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사람에게도 합당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시청자들에게 정직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등의 보도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공정성은 미국의 언론의 객관성 또는 영

---

<sup>4</sup> ‘시소에서 수레바퀴로’ 는 BBC가 2007년에 발행한 보고서로, BBC는 이 보고서에서 변화하는 영국 사회와 방송환경에 기초하여 ‘불편부당성’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sup>5</sup> ‘닐 보고서’ 는 BBC의 길리건 사태 직후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BBC 저널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록하고 제언을 담은 보고서이고, ‘2010년 편집가이드라인’ 은 BBC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침들을 담은 것으로 2005년 이후 5년 만에 새로 개정되었다.

국의 불편부당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공정성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구의 여러 개념들과 섞여 사용되어 왔고, 이는 공정성 개념에 대한 더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국내 학자들은 서구의 객관성 논의를 기반으로 하되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재개념화하였지만, 이들이 제시한 각기 다른 차원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백선기, 1992a). 따라서 내용분석을 통해 실제 뉴스 보도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연구에서는 기존에 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하위 개념들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며, 백선기(1992a, 1992b, 2001)가 실제 보도를 분석함에 있어 공정성을 사실성과 균형성의 확보로 단순화시킨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는 공정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실성과 균형성(균등성·불편부당성)의 확보라고 보고, 이를 실제 보도의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실성 확보는 좁은 의미의 객관성 개념으로 모든 보도에 있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정성 평가의 주된 척도는 균형성 확보라는 것이다. 즉, 공정성은 “사실성 확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그 다음 차원인 균형성을 어느 정도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1992a, 186쪽)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균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회의 보편화된 가치와 이념과 연관됨으로써 윤리적 차원과 이데올로기 차원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백선기, 1992a), 그의 연구에서 윤리성과 이데올로기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강태영(2000, 2004)도 공정한 보도를 정확한 보도, 질적·양적으로 균형 있는 보도, 적절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은 보도, 단편적이지 않은 종합적 보도, 다양한 정보와 견해가 반영된 보도, 양시양비론을 지양하는 보도, 불편부당한 보도를 공정한 보도로 정리하고 기존에 논의된 여

러 하위개념들을 조작화하여 구체적인 분석틀을 제시하였지만<sup>6</sup>, 윤리성과 이데올로기와 같은 개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개념의 주관성과 검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뉴스보도를 분석함에 있어 공정성 판별의 기준은 평가가 용이한 양적 균형성과 같은 개념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아가 실제 뉴스 보도 및 심의에 있어서도 실현과 검증이 용이한 양적 균형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 이론적 차원의 공정성과 실천적 차원의 공정성간의 괴리가 발생했다(박재영, 2005; 이창현, 2008; 최민재·김재영, 2008).

이처럼 공정성 개념을 하위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연구는 인접개념들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 틀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분석하는 기준을 제공해주었지만, 그러한 하위개념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상호배타성이 확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민웅 외, 2006; 최민재·김재영, 2008). 이에 기존의 개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부경희(1995)는 자유주의 이론에 부합하는 하부개념들로 사실성, 중립성, 완전성을, 사회책임이론에 부합하는 하부개념들로 적절성, 균형성, 다양성을 묶어 이분적 구조를 제시하였고, 이창현(2004)은 언론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보고 양적 균형을 강조하는 형식적 공정성(formal fairness)과 언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보고 질적 균형을 강조하는 내용적 공정성(material fairness)으로 구분하였다. 김민환 외(2008)도 외국의 공정성 개념과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사실성, 불편부

---

<sup>6</sup> 강태영(2000)은 공정성의 하위개념으로는 진실성, 적절성, (양적)균형성, 다양성, (질적)중립성, 종합성을 제시하고, 기초자료의 정확성, 신뢰할만한 정보원, 추측보도가 아닌 사실보도, 아이템 선정과 배치, 아이템 배치, 방송시간·꼭지 제시순서·보도형식·보도 유형의 균형, 다양한 계층의 입장·정보 제공, 이슈에 대한 다양한 입장·정보 제공, 보도태도 및 보도논조의 중립성, 대안제시 및 심층보도를 분석유목으로 삼았다.

당성, 균형성<sup>7</sup> 세 가지 원칙이 우리의 공정성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도 공정성 하위개념 연구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 2. 공정성 연구의 다변화

공정성의 하위개념에 대한 이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 이유로 지적되는 것은, 공정보도가 공정성 그 자체 또는 몇 개의 하위개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유종원, 1995), 다차원적 개념은 구성개념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렵고 여러 개념 중 어떤 개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개념들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나아가 공정성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문종대·윤영태, 2004; 윤영철, 2004). 또한 다양한 구성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정의가 어렵고 개념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문종대·윤영태, 2004).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결국 공정성을 하위개념으로 규명하는 논의들이 하나의 최종적인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은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같은 이유로 공정성의 하위개념화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공정성에

---

<sup>7</sup> 사실성은 ‘방송 보도가 검증이 가능한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는 것’, 불편부당성은 ‘방송이 공적인 중요성을 띠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룰 때 특정한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의사 표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균형성은 ‘방송이 관련당사자나 방송대상자의 비중이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공명정대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김민환 외, 2008). 그러나 신주형(2010)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들은 김민환 외(2008)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 중 불편부당성과 균형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접근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유종원(1995)은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위상과 ‘공정’의 의미에 주목하여, 언론에게 요구되는 것이 심판으로서의 공정인지, 선수로서의 공정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심판으로서의 공정이라면, 배심원제형 심판인지 단독판사형 심판인지 그 역할에 따라 언론의 공정성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배심원제에서 판사는 재판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진행자의 성격을 가질 뿐, 유·무죄에 대한 가치판단은 배심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배심원제형 심판의 공정함은 ‘절차의 공정함’이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언론이 배심원제 판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면 언론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균형 있게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한편 단독판사형의 경우, 배심원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배심원이 아닌 판사 자신이 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관점에서 언론의 공정성은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판단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유종원(1995)은 경험주의적 전통이 강한 서구에서는 언론을 가치판단이 배제된 배심원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한국에서의 언론은 단독판사형 심판이라고 주장한다.<sup>8</sup> 따라서 한국에서 공정보도는 항상 옳은 것을 말하려는 적극적 개념의 불편부당이라는 것이다. 유종원은 우리의 공정보도가 서구의 것과 다른 이유로 유교적인 문화전통과 개항 이후의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꼽는다. 우리는 통치자나 심판관에게 요구해왔던 공명정대함을, 다양한 때로는 상충되는

---

<sup>8</sup> 유종원(1995)은 우리나라 최초 민간지인 독립신문의 창간사 및 사설 등을 통해 우리 언론의 역할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정부관리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발하고, 사사로운 백성일지라도 무법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신문에 폭로할 것”이라는 독립신문의 창간호 사설을 인용하여 우리 언론 스스로가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관점들을 보도하는 언론에 요구해왔다는 임태섭(1993)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최영재(2004)는 기존의 소모적인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보다 근본적이고 이론적인 기반에서 공정성의 구성 원리와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언론의 공정성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언론 스스로의 자유와 함께 시민의 언론자유를 배려하는 정신이고, 언론의 책임 측면에서 다양한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표현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정의로운 언론의 원리 속에서 작동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언론의 공정성은 “민주사회 내부에서 관용 가능한 언론자유를 규정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규범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 (283쪽)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정성의 운영 원리로 무엇보다 언론자유가 우선되어야 하되, 사회 내에서 다른 세력과 개인들의 언론자유를 인정하는 관용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이 같은 다원성이 갈등이나 투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사회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가치와 덕목이 필요한데, 정의로서 언론의 공정성은 이러한 가치나 덕목을 함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종대와 윤영태(2004)도 언론의 자유를 공정성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언론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공정성의 재개념화를 시도하였는데, 언론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보편적 가치를 자기 의지화하여 보도할 때 공정한 언론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다원적인 가치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언론의 공정성 판단은 가치 불확정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합당한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원적인 가치 사회에서 언론보도의 공정성이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언론보도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로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을 배반하는 것이라 보았다. 즉,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양한 가치간의 차이와 갈등을 용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준의 공정성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주장의 근거는 다를지라도 결국 공정한 언론보도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 즉 그 사회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공정 보도가 사회적 선의 실현이라는 이상 또는 근본가치를 상징한다는 이준웅과 김경모(2008)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문종대와 윤영태(2004)의 주장처럼 가치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준웅과 김경모(2008)는 다차원적이고 때로는 상충하는 선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을 실현할 수 있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에 대해 합의” (21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실천적 규범을 도출하려고 할 때 언론의 이상과 가치, 언론인의 수행적 목표, 언론의 실천적 규범, 뉴스 텍스트 속성 등 다른 수준의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한계에 주목하며, 그들의 연구에서는 뉴스의 텍스트 구성요소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혼란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서 주목할 점은, 최영재(2004)나 문종대와 윤영태(2004)가 재개념화하고자 한 제도적 수준에서의 공정성은 기존의 공정성 하위개념에 관한 연구들과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우나, 이준웅과 김경모(2008)는 뉴스 텍스트의 구성요소에 집중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연결선상에서 공정성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연적

으로는 담론적 공정성을 확립하고 외연적으로는 약자 배려의 원칙을 지키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론적 공정성은 그 보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대상의 목소리가 담론의 구성에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뉴스 텍스트상에서 드러나는 내용적 공정성과, 실현 정도에 따라 사후에 평가 받는 수행적 공정성과 더불어 담론을 구성하는 언론인의 윤리적 공정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약자 배려의 원칙은 담론적 공정성이 보장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별도 장치로서, 담론적 공정성이 확립되어도 실질적으로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 가장 소외 받기 쉬운 비지배집단의 관점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뜻한다. 한편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뉴스 텍스트에 두 개 이상의 관점, 의견, 주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다양성의 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공정성의 기준을 선형적으로 제시하던 방식을 극복하고 사회 맥락적이며 관계적인 의미에서 공정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언론의 공정성이 다양한 가치 판단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문종대 외, 2007).

### 3. 이용자 관점에서의 공정성 논의

기존의 연구에서 언론의 공정성이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뉴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뉴스 제작자들이나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 또는 기자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한 기준에서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 관련 당사자들이나 뉴스 이용자들이 그것을 공정한 보도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부경희(1995)는 뉴스를 만들어 내는 만큼이나 많은 요소들이 뉴스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억하는 데 작용하기 때문에 좋은 뉴스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수용자의 인지적·정서적 모습이라 지적하며, “과연 학자들이 가정하고, 우려하고 비판하는 지금까지의 논의들이 실제로 수용자가 느끼는 또는 기억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실증적인 효과측정이 없는 한 뉴스에 대한 많은 관점과 이론들은 유보적일 수 밖에 없는 것” (170쪽)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민웅 외(1993)는 방송언론인들의 공정성 인식과 더불어 시청자들의 공정성 인식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들은 웨스터슈탈이 제시한 하위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방송언론인과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성 개념의 경험적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뉴스의 공정성을 객관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먼저 방송언론인의 공정성 개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진실성, 양적 균형, 질적 균형, 중립성(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 다양성, 양시양비(兩是兩非) 지양(적극적인 중립성), 적절성의 7개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보도에서 각 기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방송언론인들은 진실성, 질적 균형, 중립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청자의 인식 속에 공정성의 개념이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발견하고자 한 조사에서는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독립성의 6가지 하부 차원에 대한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이 각 하부개념들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하위 집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나 시청자들이 공정성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6개의 모든 하부차원을 뚜렷

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진실성과 적절성은 뚜렷하게 구분하였고 균형성과 중립성은 하위집단에 따라 구별 타당도는 달랐지만 이 두 개념을 합친 불편부당성<sup>9</sup>은 이용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이민웅 외(1993)는 방송언론인과 시청자들의 공정성 개념 인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면서, 방송사가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정성은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 후 학계의 연구는 언론을 공정성 영역의 주요 행위자로 규정하고 생산자 중심의 공정성 규범과 가치기준, 실천방식 등을 논하는데 집중하였고(문종대 외, 2007), 이용자 관점에서의 공정성 연구는 한동안 주춤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몇몇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문종대 외(2007)는 이용자 관점의 국내 유일한 실증적 연구인 이민웅 외(1993)의 연구가 언론학자들이 제시한 개념의 경험적 타당도를 이용자 조사에서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이는 공정성 개념이 타당한지를 보고자 한 것일 뿐 여러 개념들 중에서 이용자들은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공정성을 판단하는지를 밝히지는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언론 수용자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이용자들의 인식에서 끌어내어 기존에 학자들이 제시한 하위개념들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뉴스 이용자의 방문 면접을 통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언론보도의 사례를 들게 하였고, 사례분석을 통해서 뉴스 이용자들이 느끼는 가장 불공정한 보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불공정성 사례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을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

---

<sup>9</sup> 이민웅 외(1993)는 진실성과 적절성을 사실성, 균형성과 중립성을 불편부당성, 다양성과 독립성을 광의의 다양성으로 묶어 간편 모델로 제시하였다.

는, 공정성에 비해 불공정성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우선적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대체로 불공정한 사례를 통하여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에 접근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뉴스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불공정성 유형은 언론의 편들기/편파보도, 부주의/무책임성, 균형상실, 비윤리적이고 지나친 상업주의 문제 순으로 나타났고<sup>10</sup>, 이를 기존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들에 적용시키자면 중립성(불편부당성), 진실성, 균형성, 윤리성과 관련된 사례들이었다. 특히 편파보도에 관련된 사례가 38.9%를 차지함으로써 뉴스 이용자들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보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연구자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연구는 불공정의 사례를 두 가지 열거하라는 비보조상기(unaided recall)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불공정 사례의 최신성(recency)과 현저성(salience)에 의한 인출이 부각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직접적인 판단보다는 그 당시 논란이 된 황우석 사태와 같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슈를 언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민웅 외(1993)와 문종대 외(2007)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학자들이 제시한 하위개념들 중에서 진실성, 균형성, 중립성(불편부당성)은 이용자들의 인식 속에서 어느 정도 구분되기도 하며, 이용자들이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민웅 외(1993)의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문종대 외(2007)

---

<sup>10</sup> 각 보도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편들기/편파보도는 특정계급 편들기, 이념편향, 권언유착, 친/반정부 입장, 부주의/무책임 보도는 왜곡보도, 냄비언론, 일반화의 오류, 탐사보도의 부재, 균형상실 보도는 사건의 부정적 측면만 보도, 찬성반대 균형부재, 비윤리성과 상업성은 자사이기주의, 과열불법경쟁, 선정성/폭력성/연성화를 의미한다.

의 연구에서 윤리성과 관련된 불공정 사례가 11%를 차지함으로써 윤리성도 뉴스 이용자의 공정성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인의 공정성 인식을 분석한 김연식(2009)의 연구에서는 윤리성이 독립된 요인으로 묶이지 못하였는데, 이를 통해 뉴스 이용자들이 언론인들보다 윤리성을 공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미국 시민들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미국의 자유포럼(The Freedom Forum)에서 약 18개월간 일반 시민들 및 각종 커뮤니티의 리더,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시민들이 언제 신문이 불공정(unfair)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Haiman, 1999). 이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이 느끼는 공정성은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처럼 한 마디로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들은 언론이 사실(fact)을 잘못 보도했을 때, 부정적인 뉴스에만 집중할 때, 다양성이 부족할 때, 보도가 편향적일 때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즉, 정확성, 균형성, 다양성, 불편부당성의 측면에서 공정성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시민들은 언론인들의 취재 과정 및 그들의 윤리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기자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의 보도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었을 때, 그리고 관습적이고 정형화된 기사 작성 행위에 치우치거나 엘리트주의에 빠졌을 때 등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편, 공정성을 배분적 정의 차원에서 바라 본 손영준(2011)은 논쟁적 사안에 대한 보도에서 이용자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뉴스의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가 제시한 공정성



실천 3원칙인 업적·동등·필요 원칙<sup>11</sup> 중에서 응답자들이 동등 원칙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아, 사회적 업적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보도 비중을 정하기 보다는 각 입장에 대해 동등한 보도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밝혀냈다. 이에 손영준(2011)은 많은 학자들이 동등 원칙을 단순히 기계적 중립이나 수학적 균형으로 폄하해 온 것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지만, 실험을 통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를 분석한 안차수(2009)의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중립적인 집단은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보도를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한 반면, 보도 주제에 대한 강력한 사전태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은 대립되는 입장을 동등하게 보도한 양방향 기사보다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입장을 보도한 일방향 기사를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규범적으로는 동등 원칙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지라도 실제 공정성을 평가하는 메커니즘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규범적 판단과 인지적 판단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이용자 관점의 공정성 연구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불공정사례를 떠올리게 하거나 또는 당위 명제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사람들이 실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다. 공정한 보도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도의 공

---

<sup>11</sup> 업적 원칙은 “논쟁적 사안에 대한 의견 가운데 특정한 입장의 사람이나 집단의 사회적 비중이 클수록 더 많은 보도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동등 원칙은 “논쟁적 사안을 바라보는 유력한 견해에 대해 동일한 보도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 원칙은 “논쟁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가운데, 특정한 입장의 사람이나 집단의 당사자가 필요로 한다면 더 많은 보도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영준, 2011, 141쪽).

정성 논란은 피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후 규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최영재, 2004), 뉴스를 보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며 평상시 뉴스에 대해 축적된 경험들이 언론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실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이들이 공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 4. 뉴스 텍스트 차원에서 공정성의 의미

이용자들이 실제 언론보도에 노출될 때 공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실제 언론보도를 조작하여 이용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공정성의 구성요인으로 언급되는 모든 개념들은 단일한 차원에 속하지 않는다. 윤리성과 같은 요소는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실천적 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 언론보도의 내용만을 통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론인의 실천적 규범이나 언론의 이상과 가치와 같은 요소는 배제하고, 뉴스 텍스트 차원에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성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뉴스 텍스트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인정하되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임태섭(1993)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는 공정성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어떤 것이 더 뛰어나다고 결론짓기 힘들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맞는 정의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공정성의 하위 개념들이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인정하되, 각기 다른 차원의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 텍스트 차원에서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반영’, ‘관점 균형성’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공정성 인식을 보고자 한다. 이 세 요소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다양한 하위개념들에 포함되면서도, 어떤 특정한 개념을 독립적으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기존의 공정성 하위개념에 관한 연구들에서 학자들은 각 개념에 대해 제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각자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르면서도 표면적으로만 보면 같은 개념을 지칭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도 균형성, 불편부당성, 중립성 개념은 특히 혼란스럽다. 웨스터슈탈(Westerstahl, 1983)은 불편부당성의 하위개념으로 균형성과 중립성을 제시한 반면, 백선기(1992a, 1992b, 2001)는 균형성의 하위개념으로 불편부당성과 균등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태영(2000)은 중립성을 질적 균형성과 같은 것으로 개념화하였지만, 이민웅(1996)은 중립성과 불편부당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균형성은 이와 별도의 개념으로 보았다. 이처럼 동일개념이 되었다가 다른 개념이 되기도 하면서 개념들간의 상하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각 학자들이 개념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들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뉴스 이용자들의 공정성 인식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이민웅 외(1993)와 신주형(2010)의 연구에서도 균형성, 중립성, 불편부당성이 독립적인 요인으로 구분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미상으로 이 세 가지 요인이 상호배타적이지 못한 탓도 있지만 학자들의 일관되지 못한 정의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을 구성하는 개념들의 구조나 명칭보다는, 그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주목하여 공정성을 보고자 한다.

먼저 정보원 다양성부터 살펴보자면, 이는 공정보도의 전제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즉, 다원적이지 않은 뉴스는 공정할 수가 없으며, 적어도 둘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야 공정성이 보장된다(김민환 외, 2008; 이준웅·김경모, 2008). 언론 보도의 재료는 그것을 구성하는 정보들이고, 이 정보들은 정보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수한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PEJ)에서는 4개 이상의 확인 가능한 정보원의 사용을 우수기사의 조건으로 꼽고 있다(이재경, 2012). 확인 가능한 정보원은 독자가 기사에서 정보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이는 다양성뿐만 아니라 진실성, 정확성, 사실성과 같은 개념과도 연관된다. 김민환 외(2008)는 확인 가능한 다양한 정보원의 활용을 사실성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다양성의 측면에서 정보원 다양성은 기사의 ‘처리’와 관련된다. 다양성은 최소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보도에서 다루는 이슈 그 자체가 각계각층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제’ 측면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제공해야 한다는 ‘처리’ 측면이 있다(강태영, 2000; 부경희, 1995; 이민웅 외, 1993; 이민웅, 1996). 주제 측면에서는 주제의 종류가 많아야 함과 더불어 다양한 주제가 고르게 제시되어야 하는 비율적 다양성이 중요하며, 처리 측면에서는 정보원의 다양성, 즉 확인 가능한 정보원이 몇 명인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보원 다양성은 오래 전부터 우리 언론의 부족한 점으로 지적 받아 왔는데, 방송이든 신문이든 하나의 보도에 등장하는 평균 정보원의 수가 다른 나라 언론에 비해 현저히 적고, 등장하는 정보원 또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sup>12</sup>

---

<sup>12</sup> 이재경(2006)이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대통령 관련 기사의 취재원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대통령 참모가 50%, 대통령이 19.1%로 전체 취재원의 약 70%가 청와대 사람이었던 반면, <뉴욕타임스>는 대통령 참모가 21.2%, 대통령은 8.8%로 30%만이 백악관 사람이었다. 이재경(2006)의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한국 언론은 각기 독립

이민웅 외(1993)는 다양성 개념에 대해, 언론 보도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원주의적 민주 정치 체제 확립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는데, 하나의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 스스로가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그 사안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결정하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정보원의 효과가 규명되었는데, 페티(Petty, 1987)는 같은 메시지라도 다양한 정보원에 의해 제시될 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심사숙고하여 받아들이는 등 다른 처리 과정이 수반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 의하면, 다수의 정보원들에 의해 메시지가 전달되었어도 그들이 모두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밝혀졌을 때 이 효과는 약화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정보원의 효과가 사람들이 각각의 정보원들을 모두 독립된 관점과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가정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언론보도에서 다수의 정보원을 이용하더라도 그들이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또는 조직이라면, 이는 진정한 다양성의 구현이라 말하기 어렵다. 즉 정보원 다양성이 공정 보도의 필요 조건은 될지라도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정보원 다양성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관점 균형성이다. 균형성은 공정성 논란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 온 개념으로, 공정성의 범위가 좁혀졌을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용자들은 균형적이지 못한 보도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으며(문종대 외, 2007), 실제 뉴스 보도 및 심의에 있어서도 실현과 검증이 용이한 양적 균형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박재영, 2005; 이창현, 2008). 균형성은 보통

---

적인 관점, 배경의 취재원이 아니라 동일한 관점을 가진 취재원을 사용함으로써,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기사의 다양성이 향상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논점의 찬성과 반대를 골고루 보도하는지, 상반되는 주장을 거의 비슷한 시간 또는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하는지, 특정 사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골고루 보도하는지 등의 여부에 의해 판단되는데(문종대 외, 2007; 안차수, 2009; 이민웅 외, 1993), 양적 균형과 질적 균형 중 어떤 것을 평가 잣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적 측면에 집착하기 보다는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이는 산술적으로 같은 시간 또는 지면을 할애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어느 한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핵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민웅 외, 2006). 즉, 하나의 기사에서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산술적으로 70%를 차지하더라도 다른 한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그 기사는 균형적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 균형성뿐만 아니라 질적 균형성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질적 균형성은 중립성 또는 불편부당성과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를 특정 개념으로 지칭하고 구조화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여기서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이슈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관점들이 언론보도에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 반영은 갈등적 사안을 다루는 언론보도나 고발성 뉴스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문종대 외(2007)의 연구에서 이용자들이 언론의 불공정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편파 보도였는데, 편파보도는 결국 한쪽의 입장만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파보도에 대한 비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에서 그 보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언론에 대해 축적된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 속한 공중의 공정성 요구가 폭발” (이준웅,

2005, 155쪽)하여 언론의 편파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따라서 뉴스 보도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대상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된다면 편파보도에 대한 불만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나 영국 BBC의 조항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BBC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 보도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합당한 발언 기회를 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때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최초 보도뿐만 아니라 후속 보도에서도 그 사람의 발언을 보도할 것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삼고 있다(BBC, 2007, 2010). BBC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정당한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는 기자들의 취재 행위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뉴스 텍스트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와 함께 “의도에 충실하게, 부족함이 없이, 왜곡 없이” (이준웅, 2005, 154쪽) 반영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물론 여기서 이해 당사자를 어느 범위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비리 혐의에 대한 보도에서 가장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는 그 개인이나 조직이다. 따라서 그 혐의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반드시 보도되어야 함은 물론, 그 당사자의 해명에서 혐의와 관련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취재를 못하였을 때에는 왜 취재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찬반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보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고, 그 사안의 향후 결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를 어느

범위까지 보아야 하고 정당하게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것이 지켜졌을 때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국 공정한 보도는 확인 가능한 다양한 정보원을 포함하되, 관점 또는 배경이 다른 정보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어야 하며, 더불어 그 정보원에는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학자들에 의해 균형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다양성 개념으로 지칭되는 내용의 핵심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지표들은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공정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배선영·이봉규·이상우, 2010), 위의 논의들과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보원의 다양성이 확보된 뉴스,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된 뉴스, 관점 균형성이 확보된 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보다 해당 뉴스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1. 정보원의 수가 많은 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해당 뉴스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된 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해당 뉴스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상반되는 관점이 균형되게 제시된 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해당 뉴스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요소들이 언론의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편파보도와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보도가 부정확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문종대 외(2007)의 연구에서 이용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된 불공정 보도는 언론의 편파 보도와 관련된 사례들이었으며, 최근 언론의 불공정 보도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 또한 언론의 정파성이었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여러 개념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념들도 공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뉴스에 모든 요인들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준이다. 공정보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안에 정해진 공식처럼 이를 적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뉴스 사안에 따라 공정성 구성요소 간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날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보도에서는 그 내용의 사실성, 정확성 등과 같은 요소가 더 중요할 수 있는 반면, 상반되는 입장이 존재하는 갈등적 사안이나 개인 또는 조직의 혐의를 고발하는 뉴스에서는 균형성, 중립성 등의 요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모든 뉴스를 총체적으로 아우르기보다는 상반되는 입장이 존재하는 갈등적 사안이나 특정 조직 또는 개인의 비리 등과 같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다루는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연관성이 높은 공정성 요인에 집중하였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확인 가능한 정보원은 정보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정보원 다양성은 진실성, 정확성, 사실성 등의 개념과도 연관되어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개념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세 가지 공정성 요인들 중 어떤 변수가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기존의 연구에서 공정성

의 다양한 하위개념 중 어떤 것에 가장 큰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있었지만, 학자들이나 언론인들간 의견이 상이했다. 따라서 뉴스 이용자들이 공정성을 평가할 때 어떤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정성의 하위개념으로 논의된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보도에서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뉴스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공정성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언론 보도시 어떠한 요소를 가장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뉴스 공정성 요인인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반영, 관점 균형성 중 어떤 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 **제 2 절 적대적 매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

기존의 공정성 논의들은 뉴스보도 방식에 따라서 뉴스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가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뉴스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동일한 보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뉴스를 접한 이용자들이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리는 현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전 태도, 정치적 성향, 언론에 대한 신뢰도 등 여러 개인적인 변인들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개인이 언론매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전 태도가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언론에 대한 논쟁과 비판의 특성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비판은 보도의 내용보다는 보도의 주체인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진보 대 보수, 친정부 대 반정부로 양극화된 언론사들 간의 대립은 이용자들마저도 그들의 성향에 따라 우호적인 매체와 적대적인 매체를 편가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오택섭·박성희, 2005).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언론보도에 대한 편향지각(biased perception)을 보여준 것이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로서, 중립적인 이용자들(nonpartisans)이 편향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보도에 대해 당파적인 사람들(partisans)은 그 보도가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현상을 말한다(안차수, 2009; 오택섭·박성희, 2005; 황치성, 2007, Vallone, Ross & Lepper, 1985). 또한 실제 편향된 보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상대적인 적대적 매체 지각(relative hostile media perception)이 관찰되는데, 이용자들 모두가 보도의 편향성을 인식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식하는 편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Gunther & Chia, 2001).

이러한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차별적 기준(different standards), 선택적 범주화(selective categorization), 선택적 기억(selective recall)의 세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이 언급되는데, 이는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를 처음 제시한 밸런 외(Vallone, et al., 1985)의 주장을 원용하여 가이너-소롤라와 채이큰(Giner-Sorolla & Chaiken, 1994)이 정리한 것이다. 먼저 차별적 기준은 이용자들이 보도 내용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인식하지만, 당파적인 사람은 자신

들의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보다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자신들의 것과 균등하게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적 범주화는 이용자들이 뉴스 보도의 세부 사항을 동일하게 기억하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인 사실들마저 폭넓은 거부의 영역(the wide latitude of rejection)으로 범주화시킴으로써 뉴스 보도를 편향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기억은 당파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보도도 편향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Giner-Sorolla & Chaiken, 1994).<sup>13</sup>

이러한 원인 규명에도 불구하고, 한 편에서는 적대적 매체지각과 상반되는 현상인 동화편향(assimilation bias)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벨런외(Vallone, et al., 1985)도 적대적 매체지각 효과를 밝히면서 이와는 대립되는 동화편향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Gunther & Schmitt, 2004). 이에 건서와 슈미트(Gunther & Schmitt, 2004)는 동화편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면서 정보원(source)의 도달범위에 따라 대조편향(contrast bias)과 동화편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혀냈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요컨대, 도달범위가 넓은 신문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서는 대조편향이 일어나는 반면, 도달범위가 좁은 대학생의 에세이와 같은 글에서는 동화편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후의 연구에서도 도달범위가 넓은 정보원을 접한 이용자들은 도달범위가 좁은 정보원을 접한 이용자에 비해 강한 적대

---

<sup>13</sup> 슈미트·건서·리버트(Schmitt, Gunther & Liebhart, 2004)는 실험 연구를 통해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의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선택적 범주화만이 적대적 매체 인식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 매체 지각을 보임으로써(Gunther & Liebhart, 2006; Gunther, Miller & Liebhart, 2009), 정보원의 속성이 적대적 매체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한편, 가이너-소롤라와 채이큰(Giner-Sorolla & Chaiken, 1994)은 적대적 매체 지각이 일어나는 세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리하면서 추가로 매체 편향에 대한 사전신념(prior beliefs)에 주목하였는데, 특정 이슈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 것이라는 이용자들의 사전신념이 뉴스를 판단하는 휴리스틱(heuristic) 단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정보원, 즉 매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적대적 매체 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체에 대한 사전신념은 점차 정교화되었는데, 초기에는 그 사회의 언론 전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에 주목하였다면, 보다 최근에는 개별 매체에 대한 인식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 관련 기사를 통해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알판과 레이니(Arpan & Raney, 2003)는 기사에 등장하는 스포츠 팀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신문인가, 라이벌(rival) 팀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신문인가, 아니면 제 3지역의 신문인가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고, 연구 결과 전자의 신문을 읽은 사람보다 나머지 두 신문을 읽은 사람들이 뉴스 보도가 라이벌 팀에 더 우호적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케이블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을 실험물로 처치한 터너(Turner, 2007)와 코 외(Coe, et al., 2008)의 연구에서도 적대적 매체 지각에 있어 개별 매체가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터너(Turner, 2007)는 미국 케이블 방송의 정파성을 기반으로 하여 보수적이라고 인식되는 폭스뉴스(Fox News)와 진보적이라고 인식되는 CNN의 보도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후, 각 뉴스보도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진보적인

사람은 CNN을 중립에 가깝게 판단한 반면 폭스뉴스를 보수적이라고 응답했고, 보수적인 사람은 폭스뉴스를 중립에 가깝게 판단한 반면 CNN을 진보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폭스뉴스(Fox News)와 데일리쇼(The Daily Show)의 보도를 실험물로 처치한 코 외(Coe, et al., 200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인 사람은 폭스뉴스가 더 편향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적인 사람은 데일리쇼가 더 편향적이라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 뉴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반대되는 뉴스 프로그램이 더 편향적이라고 판단하는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코 외(Coe, et al., 2008)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일치하는 프로그램이 더 흥미롭고(interesting), 더 정보적이라고(informative) 인식한다는 결과도 밝혀냈는데, 이는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가 보도의 편향성뿐만 아니라 뉴스의 다른 측면에서도 유효함을 입증함으로써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연구들은 ‘매체’의 속성이나 이용자들의 ‘매체’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적대적 매체 지각을 보고 있지만, 적대적 매체 지각 연구의 출발점은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차이가 매체의 편향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범위가 확장되고 변인들이 정교화되면서 매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슈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도 이슈에 대한 찬반 입장에서 나아가 이용자 개인들에게 그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얼마나 확고하고 극단적인지 등의 ‘관여도’(involvement)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관여도와 적대적 매체 지각의 상관관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관여도에 대한 정의 및 측정 방법이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

적이 있다(Choi, Yang & Chang, 2009). 이에 최 외(Choi, et al., 2009)는 관여도는 몇 개의 차원으로 다시 나뉠 수 있고, 각기 다른 차원의 관여도는 이용자들의 인식 과정에서도 다르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슈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이 자신의 정체성, 신념 및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을 때<sup>14</sup>, 관여도와 적대적 매체 지각은 정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슈에 대한 관여도는 적대적 매체 지각을 유발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임은 틀림없지만, 국내의 연구는 매체에 대한 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언론의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보수 대 진보, 친정부 대 반정부 등 양자대립 구조로 일관된 언론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의 영향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오택섭·박성희, 2005; 황치성, 2007). 오택섭과 박성희(2005)는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신문매체만 달리하여 제시한 후, 응답자들이 기사의 편향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해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모두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동화편향을 보였으나, 방향과 정도를 고려했을 때는 상대적인 적대적 매체 지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두 집단에서 각각 적대매체가 드러났다는 것인데, 할당제를 반대하는 집단은 한겨레신문이, 할당제를 찬성하는 집단은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입장과 반대되는 쪽으로 편향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의 고정관념이 이러한 인식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

<sup>14</sup> 이를 ‘가치 관련 관여도’(value-relevant involvement)라 한다. 한편, 이슈에 대한 의견이 자신의 향후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기반하고 있을 때는 ‘결과 관련 관여도’(outcome-relevant involvement)라 하는데, 이는 적대적 매체 지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Choi, et al., 2009).

지역인재활당제는 그 당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었고 정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은 친정부 신문이고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반정부신문이라는 선입견이 피험자들의 편향성 인식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뉴스 이용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기사내용(메시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보원(메신저)에 대한 것” (162쪽)임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황치성(2007)은 이용자들의 특정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를 직접 측정하여 사전태도에 따른 편향성 인식을 보고자 하였는데, 신문의 구독 정도, 신문에 대한 신뢰도, 자신의 정치성향과 특정 신문의 정치적 성향의 거리, 자신의 정부에 대한 입장과 특정 신문이 정부에 가지는 입장의 차이를 모두 고려하였다. 그 결과, 조선일보를 읽은 피험자들에게서만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정 신문에 대한 태도는 기사의 편향성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특정 매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전태도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매체의 기사를 그렇지 않은 매체의 기사보다 더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주 종속변인인 ‘편향성’ (bias)을 ‘중립성’ (neutrality)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성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립성과 공정성이 같은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중립성은 공정성의 중요한 하위개념으로 논의되어 왔고, 코 외(Coe, et al., 2008)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편향성 외에 흥미성, 정보성과 같은 차원에서도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이용자들의 공정성 인식에서도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매체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매체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즉, 조선일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조선일보 기사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조선일보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조선일보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를 접할 때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많은 반론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Brock, 1967; Petty & Wegener, 1998에서 재인용), 특정 매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매체의 언론보도를 접할 때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면, 단지 정보원의 수가 아닌 기사에 등장하는 정보원들의 배경과 관점 등 더 세밀한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평가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자신이 싫어하는 매체의 보도를 선택적으로 회피한다면 그 보도에 대한 공정성 평가과정은 오히려 더 간단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그 매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연구문제2>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문제 2. 뉴스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해당 매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공정성 요인이 달라지는가?**

매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가 중립적인 보도마저 편향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결국 “편향된 것은 기사가 아니라 독자의 편향된 시각” (오택섭·박성희, 2005, 162쪽)이라

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준웅(2005)은 우리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비판의 본질은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이며, 이는 ‘비판적 담론 공중들’(critical discursive publics)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함에 대한 분노로 이념적·정치적 상대방에 공격과 비판을 일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은 언론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모두 공중들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언론과 사회의 문제점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황치성(2007) 또한 이용자의 적대적 매체 지각의 원인이 이용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 관찰되고 경험된 언론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았다.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여도 편향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이를 공정하게 보지 않는다면, 언론은 충분히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들의 행위를 돌이켜볼 때 그들이 정말 그러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이용자의 언론에 대한 태도는 언론의 행위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를 통해 언론을 두둔하고 공중을 탓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을 두둔할 수 없는 것처럼 이용자의 지각편향 또한 단지 심리적인 메커니즘으로 규명하고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용자들이 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보다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가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고 마냥 비판할 수 없다. 뉴스 이용자들 또한 자신들이 ‘공정하게’ 언론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연구문제3>은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과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 중 이용자의 공정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과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 중 어떤 변수  
가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 제 3 장 연구방법

## 제 1 절 실험방법

### 1. 실험설계

<표1>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에 따른 실험설계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반영	관점 균형성	
		유	무
강	유	A	B
	무	C	D
약	유	E	F
	무	G	H

위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의 포함 여부 및 강약 정도에 따라 <표1>과 같이 2(정보원 다양성: 강, 약) x 2(이해당사자 반영: 유, 무) x 2(관점 균형성: 유, 무)로 설계했고, 추가로 매체에 대한 태도가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매체만 달리하여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2 x 2 x 2 x 2(매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피험자 간 실험 설계를 실시하였다. 매체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선택하였는데, 언론의 공정성은 신문보다 방송에 더 요구되는 덕목이고 신문이 방송보다는 공정성 요구에서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공정한 신문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문 기사를 실험처치물로 택한 것은 방송뉴스가 현실적으로 실험조작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가 방송보다 신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KBS, MBC, SBS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 차이보다 독자층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 차이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 2. 피험자 모집 및 실험절차

피험자는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의 패널을 통해서 총 512 명을 모집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02 명의 피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자가 252 명으로 50.2%, 여자가 250 명으로 각각 49.8%를 차지하였으며, 평균연령은 38.67 세( $SD = 11.16$ )였다. 16 개의 실험집단에 피험자를 배치시켜야 하므로 각 집단 별 피험자 수가 적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피험자 모집이 용이한 온라인 실험을 택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온라인 실험의 외적 타당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험은 2012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엠브레인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16개의 실험집단 중 하나에 무선 배치되었고, 간단한 안내지침이 나간 후 실험이 시작되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신문기사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라고 제시하였고, 기사를 읽은 후 각 질문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즉시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기사를 읽은 후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사를 다시 읽지 말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는 기사를 다시 읽고 질문에 답하게 되면 피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기사를 읽을 때보다 더 꼼꼼하게 기사를 분석함으

로써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를 끝까지 읽지 않고 질문에 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사가 화면에 나타난 후 최소 15초가 경과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주제가 다른 세 건의 기사를 읽고, 하나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즉시 그 기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세 건의 기사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 피험자가 읽은 기사의 매체에 대한 사전 태도를 측정하였고, 학력, 소득, 거주지 등의 인구사회학적 질문에 응답하게 한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 제 2 절 실험처치

실험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보도된 기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반영, 관점 균형을 조작하기 위해서 실제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하고 갈등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선택하였다. 또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옳고 그름이 공식적으로 판결 나지 않은 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사 몇 건을 선정한 후, 실제 그 주제와 관련된 기사들을 모두 검색하여 그 기사에 어떤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고 그들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원 다양성이 강한 조건에 해당하는 실험처치물을 만들기 위해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기사에서 어떤 정보원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수가 충분히 많은지를 사전 검토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입시논란, 정치폭로, 사회고발과 관련된 총 세 건의 기사를 실험처치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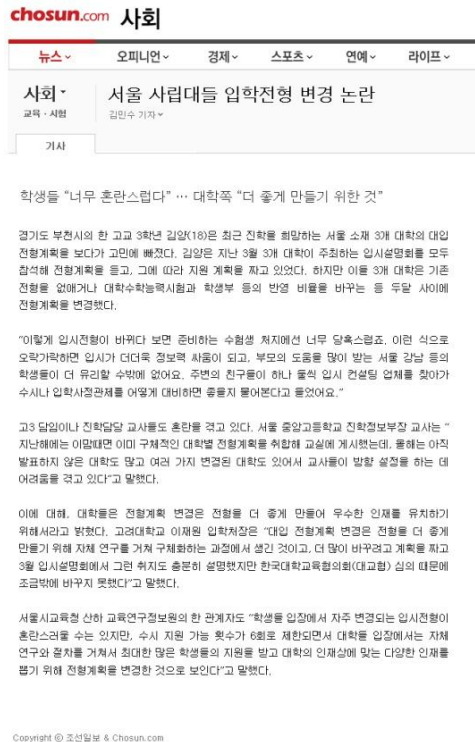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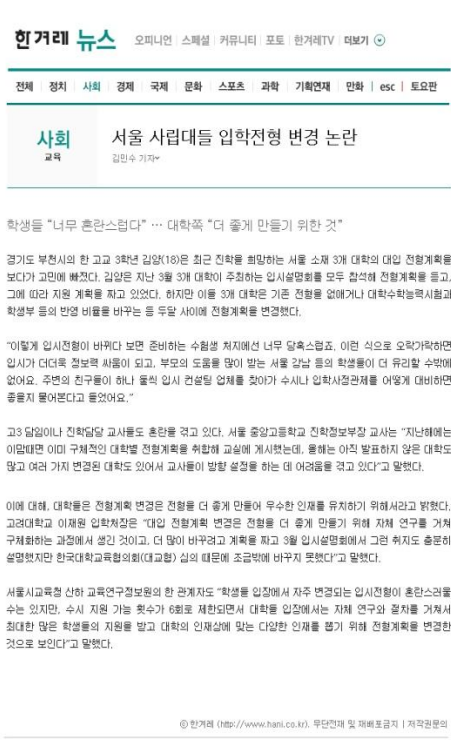
입시논란 기사(기사 A)는 대학교들의 잦은 입학전형계획 변경에 관한 논란, 정치폭로 기사(기사 B)는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표절 의혹, 그리고 사회고발 기사(기사 C)는 수입 섬유유연제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다.

정보원 다양성은 하나의 기사 내에 확인 가능한 정보원이 몇 명인지를 의미하며, 다양성이 강한 조건에서는 4명의 정보원, 약한 조건에서는 2명 또는 1명의 정보원을 등장시켰다. 강력한 실험처치를 위해 정보원 다양성이 약한 조건에서 1명의 정보원만 등장시키려 했으나, 그럴 경우 다른 독립변인인 이해당사자 반영의 조작이 불가능하였다. 이해당사자가 모두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정보원이 등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반영되고 정보원이 다양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2명, 이해당사자도 반영되지 않고 정보원도 다양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1명을 등장시켰다. 또한 기사에 등장하는 정보원들은 각기 다른 직업 또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다룬 기사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문화방송과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상황실장,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과 대학교수를 등장시켰다.

두 번째 독립변인인 이해당사자 반영은, 이해당사자가 기사에 등장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두 조건으로 나누어 조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해당사자는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논란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기사 A>에서는 대학교, <기사 B>에서는 안철수 후보, <기사 C>에서는 섬유유연제의 제조업체가 이해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이해당사자가 반영된 조건에서는 기사에 이들을 등장시켰고,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는 이들 대신 다른 정보원을 등장시켰다. 그러나 그 정보원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식으로 보도가 되면 이는 이해당사

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보원 본인의 의견인 것처럼 조작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관점 균형성은 양적 균형성과 질적 균형성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성이 갖춰진 조건에서는 상반되는 관점이 고르게 보도되도록 조작하였으며, 균형성이 갖춰지지 않은 조건에서는 하나의 관점만 부각되도록 조작하였다. 균형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양적 측면에서는 어느 한 관점이 기사 지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였고, 질적 측면에서는 부각되지 않은 관점에 대해서 핵심내용보다 주변내용 위주로 구성되도록 조작하였다.



<그림 4> 실험처치용 기사 이미지



달레시오(D' Alessio, 2003)의 연구에 따르면, 뉴스기사에서 독자들의 편향된 인식을 가장 잘 이끌어내는 구성요소는 정보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실험처치 강화를 위해 각 정보원들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는 방법으로 기사를 조작하였다.

기사 형식은 실제 <조선일보> 웹사이트와 <한겨레신문> 웹사이트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가외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기사 주변의 광고나 댓글은 보이지 않도록 삭제하였다. 기사의 길이는 <기사 A>는 최소 956자/ 최대 1022자, <기사 B>는 최소 924자/ 최대 1096자, <기사 C>는 최소 820자/ 최대 977자였다. 정보원의 인적 사항이 차지하는 분량 등의 차이로 인해 각 실험 조건 별로 기사의 길이를 완벽히 맞추지는 못하였으나, 그 차이가 원고지 분량으로 1페이지 이상 나지 않도록 했다.

### 제 3 절 변인측정

#### 1. 공정성

뉴스의 공정성 평가지표는 이민웅 외(1993)가 사용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들(문종대 외, 2007; 안차수, 2009)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표2>에서 제시된 항목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여, 그 값의 평균을 구해 사용하였다(기사 A:  $M = 4.22$ ,  $SD = .80$ ,  $\alpha = .893$ , 기사 B:  $M = 3.91$ ,  $SD = 1.02$ ,  $\alpha = .934$ , 기사 C:  $M = 4.36$ ,  $SD = .88$ ,

<표2> 뉴스 공정성의 평가지표

---

공정성

---

기사내용이 정확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했다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광범위한 취재를 했다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뉴스를 보도했다  
뉴스가치가 있는 것을 보도했다  
논점의 찬성과 반대를 골고루 보도했다  
상반되는 주장은 거의 비슷한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했다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했다  
각계각층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취급했다  
폭넓은 정보와 견해를 고르게 보도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가치를 뉴스에서 뒷받침했다

---

$$\alpha = .926).^{15}$$

## 2.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

황치성(2007)은 특정 신문에 대한 태도를 신문의 구독 정도, 신문에 대한 신뢰도, 자신의 정치성향과 특정 신문의 정치적 성향의 거리, 자신의 정부에 대한 입장과 특정 신문이 정부에 가지는 입장의 차이로 측정하였고, 오택섭과 박성희(2005)는 신문에 대한 호오(好惡)의 감정까지 포함하였다.

---

<sup>15</sup> <표2>에 제시된 항목 외에도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거나 소홀하게 취급했다”, “어느 한쪽을 봐주기 식으로 편들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보도했다” 라는 항목이 포함되었으나, 요인분석에서 이 세 가지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었다. 이는 피험자들이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다른 질문에 대한 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결과분석에서 이 세 항목은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일반적으로 인지·감정·행동적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착안하여(김영석, 2008), 각 차원 별로 측정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읽은 기사의 해당매체에 대한 사전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조선일보를 읽은 집단은 조선일보에 대해서만, 그리고 한겨레신문을 읽은 집단은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만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인지적 차원에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믿을만하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읽을 가치가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정치성향과 정부에 대한 입장 측면에서 응답자가 특정 신문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하게 인식하는지를 보기 위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고 5점 척도(1점 = 매우 진보적, 5점 = 매우 보수적)로 답하게 하였고, “조선일보는/ 한겨레신문은 현 정부 전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5점 척도(1점 = 매우 반대, 5점 = 매우 찬성)로 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응답자 자신의 정치성향과 정부에 대한 입장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로 5점 척도(1점 = 매우 진보적, 5점 = 매우 보수적)로 답하게 하였고, “귀하는 현 정부 전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5점 척도(1점 = 매우 반대, 5점 = 매우 찬성)로 답하게 하였다. 그 후 ‘(자신의 정치성향 및 대정부입장) - (자신이 생각하는 특정 신문의 정치성향 및 대정부입장)’의 절댓값을 구하여, 응답자가 인식하는 매체와의 거리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매우 진보적(1)’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5)’ 이라고 응답했다면, ‘1-

5=(-4)’, 즉 응답자와 조선일보 간의 정치적 성향의 거리는 4이다. 한편, 자신의 입장이 ‘매우 보수적(5)’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응답했다면, ‘5-5=0’ 으로 그 거리는 0이다. 따라서 이 값의 범위는 0~4이고, 값이 클수록 응답자는 그 신문의 정치적 성향 및 정부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그것과는 다르게 인식함을 뜻한다. 인지적 차원을 측정하는 다른 항목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이용자가 해당 매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을 뜻하므로, 절댓값 계산 후 0~4를 1~5로 바꾸어 역코딩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은 7점 척도로 변환하여 인지적 차원의 평균값을 구하였고( $M = 4.78$ ,  $SD = 1.22$ ), 이 값이 높을수록 인지적 차원에서 매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감정적 차원에서는 좋고 싫음, 친밀감의 정도를 통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대한 태도를 보고자 하였다. “조선일보를/ 한겨레신문을 좋아한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 라는 2개의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그 값의 평균을 구해 사용하였다( $M = 3.72$ ,  $SD = 1.55$ ).

마지막으로, 행동적 차원에서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읽으십니까? (종이신문, 온라인, 모바일 모두 포함)” 라는 질문을 개방형으로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M = 3.03$ ,  $SD = 4.13$ ,  $\min = 0$ ,  $\max = 50$ ). 그리고 이를 7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sup>16</sup>

---

<sup>16</sup> 0회는 ‘1’, 1~2회는 ‘2’, 3~4회는 ‘3’, 5~6회는 ‘4’, 7~8회는 ‘5’, 9~10회는 ‘6’, 11회 이상은 ‘7’ 로 변환하였다.

### 3. 주제관여도

적대적 매체지각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뉴스 주제에 대한 관여도는 이용자들의 뉴스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실험처치물이 하나의 주제에 국한되지 않도록 각기 다른 주제의 세 건의 기사를 선정하였지만, 설문을 통해 피험자들의 각 기사에 대한 주제관여도를 직접 측정하였다. 기사를 읽고 공정성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이 끝난 후, “방금 읽은 기사의 주제에 평소 관심이 많다”, “방금 읽은 기사의 주제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기사 A:  $M = 3.83$ ,  $SD = 1.46$ , 기사 B:  $M = 3.98$ ,  $SD = 1.42$ , 기사 C:  $M = 4.65$ ,  $SD = 1.38$ ).

## 제 4 장 연구결과

### 제 1 절 조작화 검증

조작화 검증은 본 조사의 피험자들과는 별도로 서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응답자에게 주제별 세 건의 기사를 제시한 후, 기사에서 처치된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즉, “방금 읽은 기사는 다양한 정보원을 취재 보도했다”, “방금 읽은 기사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였다”, “방금 읽은 기사는 각각의 관점을 골고루 보도했다” 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한 기사를 본 응답자( $M = 4.13$ ,  $SD = 1.55$ )는 그렇지 않은 기사를 본 응답자( $M = 2.61$ ,  $SD = 1.35$ )에 비해 해당 기사가 다양한 정보원을 취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19) = -7.866$ ,  $p < .001$ ). 또한 이해당사자가 반영된 기사를 본 응답자( $M = 4.38$ ,  $SD = 1.48$ )는 그렇지 않은 기사를 본 응답자( $M = 3.46$ ,  $SD = 1.67$ )에 비해 해당 기사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응답했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18) = -4.366$ ,  $p < .001$ ). 마지막으로 관점이 균형적인 기사를 본 응답자( $M = 4.50$ ,  $SD = 1.39$ )는 그렇지 않은 기사를 본 응답자( $M = 3.45$ ,  $SD = 1.78$ )에 비해 해당 기사의 관점이 균형적이라고 응답했고,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13) = -4.932$ ,  $p < .001$ ). 따라서 기사의 공정성 구성요인에 대한

실험 처치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험자들이 기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사가 어렵지 않게 읽히는지도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기사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그 결과 모든 기사는 어려움 없이 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 5.44$ ,  $SD = 1.46$ ).

<표3>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조작화 검증)

조건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정보원 다양성	약	2.61	1.35	-7.87	218.640	.000
	강	4.13	1.55			
이해당사자 반영	무	3.46	1.67	-4.37	218.327	.000
	유	4.38	1.48			
관점 균형성	무	3.45	1.78	-4.93	213.477	.000
	유	4.50	1.39			

## 제 2 절 피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설 검증에 앞서 피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부터 살펴보면, 피험자의 성별과 연령대의 분포는 거의 균등하다고 볼 수 있다. 소득계층은 중위층이 가장 많았지만 상위층보다 하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전체 피험자의 약 70%를 차지하여 대체적으로 고학력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정치성향에 대해서는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보수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보다 약간 많았으

며, 거주지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피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상세 사항은 <표4>에서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종속변인의 상관관계를 <표5>에서 제시하였다.

<표 4> 피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52	50.2
	여자	250	49.8
연령대	20 대	126	25.1
	30 대	127	25.3
	40 대	123	24.5
	50 대	126	25.1
소득계층	하위층	60	12.0
	중하위층	172	34.3
	중위층	221	44.0
	중상위층	45	9.0
	상위층	4	0.8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2	0.4
	중학교졸업	6	1.2
	고등학교졸업	92	18.3
	대학교재학	52	10.4
	대학교졸업	296	59.0
	대학원재학이상	54	10.8
정치성향	매우진보	15	3.0
	진보	143	28.5
	중도	245	48.8
	보수	90	17.9
	매우보수	9	1.8
거주지역 형태	대도시	302	60.2
	중소도시	161	32.1
	군읍면	39	7.8
합계		502	100.0



<표5>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

		공정성평가	성별	연령	소득계층	학력	정치성향	거주지역형태
공정성평가	상관계수							
	유의확률							
성별	상관계수	-.014						
	유의확률	.748						
연령	상관계수	.092*	-.018					
	유의확률	.039	.682					
소득계층	상관계수	.028	.014	.053				
	유의확률	.534	.750	.238				
학력	상관계수	-.038	-.117**	-.046	.259**			
	유의확률	.395	.009	.300	.000			
정치성향	상관계수	-.022	-.053	.168**	.065	-.067		
	유의확률	.621	.236	.000	.146	.137		
거주지역 형태	상관계수	-.028	.083	.041	-.124**	-.069	.025	
	유의확률	.538	.064	.356	.006	.123	.580	

\*p < .05, \*\*p < .01

### 제 3 절 실험집단별 공정성 평가

각 실험집단별 공정성 평가의 평균값을 <표6>, <표7>, <표8>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입시논란을 다룬 <기사 A>를 살펴보면,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정보원이 다양하고, 이해당사자가 반영되고, 관점이 균형적인 기사의 공정성 평가치( $M = 4.36$ ,  $SD = .77$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는 정보원이 다양하지 않고, 이해당사자가 반영되지 않고, 관점이 균형적이지 않은 기사의 공정성 평가치( $M = 4.36$ ,  $SD = .83$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폭로와 관련된 <기사 B>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정보원이 다양하고, 이해당사자가 반영되고, 관점이 균형적인 기사의 공정성 평가치가 가장 높았다(조선일보:  $M = 4.10$ ,  $SD = 1.28$ , 한겨레신문:  $M = 4.28$ ,  $SD = .98$ ).

<표 6> <기사 A>에 대한 실험집단별 공정성 평가

매체	정보원다양성	이해당사자반영	관점 균형성	
			유	무
조선일보	강	유	4.36	4.28
		무	3.94	4.17
	약	유	4.30	4.02
		무	4.22	4.08
한겨레신문	강	유	4.30	4.22
		무	4.22	4.31
	약	유	4.30	4.21
		무	4.24	4.36

<표 7> <기사 B>에 대한 실험집단별 공정성 평가

	정보원다양성	이해당사자반영	관점 균형성	
			유	무
조선일보	강	유	4.10	4.08
		무	4.09	3.59
	약	유	3.91	3.60
		무	3.67	3.35
한겨레신문	강	유	4.28	3.87
		무	4.24	4.05
	약	유	4.25	3.77
		무	3.86	3.82

마지막으로 사회고발과 관련된 <기사 C>를 살펴보면,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정보원이 다양하고, 이해당사자가 반영되고, 관점이 균형적이지 않은 기사의 공정성 평가치( $M = 4.61, SD = .66$ )가 가장 높았으나,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는 정보원이 다양하고, 이해당사자가 반영되고, 관점이 균형적인 기사의 공정성 평가치( $M = 4.64, SD = .76$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기사 C>에 대한 실험집단별 공정성 평가

	정보원다양성	이해당사자반영	관점 균형성	
			유	무
조선일보	강	유	4.32	4.61
		무	4.28	4.16
	약	유	4.43	4.33
		무	4.25	4.12
한겨레신문	강	유	4.64	4.27
		무	4.35	4.37
	약	유	4.27	4.38
		무	4.45	4.50

## 제 4 절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 1.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연구가설1>, <연구가설2>, <연구가설3>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기사 주제별로 차이가 없는지, 즉 개체 내 효과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해 반복측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형성 가설이 기각되어(*Mauchly's W* = .985, *p* = .028) 기사 주제별로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각 주제별로 분리하여 삼원공변량분석(Three-way ANCOVA)을 실시하였고, 성별, 연령, 정치성향, 매체에 대한 인지차원·감정차원·행동차원의 태도, 주제관여도를 공변량(covariate)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정보원 다양성’의 경우, <기사 B>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F = 11.736, p < .01, \eta^2 = .024$ ), <기사 A>와 <기사 C>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 관련 기사에 대해서만 정보원의 수가 많은 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들( $M = 4.04, SD = 1.06$ )은 그렇지 않은 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들( $M = 3.78, SD = 1.06$ )보다 해당 뉴스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연구가설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이해당사자 반영’의 경우에도, <기사 B>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F = 5.118, p < 0.05, \eta^2 = .10$ ), <기사 A>와 <기사 C>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 관련 기사에서 대해서만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된 기사에 노출된 이용자들( $M = 3.99$ ,  $SD = .95$ )은 그렇지 않은 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들( $M = 3.83$ ,  $SD = 1.08$ )보다 해당 뉴스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연구가설2>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셋째, ‘관점 균형성’의 경우도 ‘정보원 다양성’과 ‘이해당사자 반영’과 마찬가지로, <기사 B>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F = 9.261$ ,  $p < .01$ ,  $\eta_p^2 = .019$ ), <기사 A>와 <기사 C>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정치 관련 기사에 대해서만 상반되는 관점이 균형되게 제시된 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들( $M = 4.05$ ,  $SD = 1.05$ )은 그렇지 않은 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들( $M = 3.77$ ,  $SD = .97$ )에 비해 해당 뉴스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연구가설3>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종합하자면, <연구가설1>, <연구가설2>, <연구가설3>은 정치와 관련된 기사에서만 지지되었고, 나머지 기사에서는 기각되었다.

<표9> <기사 A>: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eta p^2$
수정 모형	83.434	14	5.960	12.265	.000	.261
절편	96.965	1	96.965	199.555	.000	.291
성별	3.176	1	3.176	6.537	.011	.013
연령	2.842	1	2.842	5.849	.016	.012
정치성향	2.464	1	2.464	5.071	.025	.010
인지차원태도	.889	1	.889	1.830	.177	.004
감정차원태도	8.607	1	8.607	17.712	.000	.035
행동차원태도	.019	1	.019	.039	.843	.000
주제관여도	12.831	1	12.831	26.406	.000	.051
정보원다양성	.139	1	.139	.286	.593	.001
이해당사자반영	.807	1	.807	1.660	.198	.003
관점균형성	.000	1	.000	.000	.993	.000
정보원다양성 *	.026	1	.026	.053	.817	.000
이해당사자반영						
정보원다양성 *	.417	1	.417	.858	.355	.002
관점균형성						
이해당사자반영 *	.551	1	.551	1.133	.288	.002
관점균형성						
정보원다양성 *	.693	1	.693	1.426	.233	.003
이해당사자반영 *						
관점균형성						
오차	236.637	487	.486			
합계	9261.545	502				
수정 합계	320.071	501				

a.  $R^2 = .261$  (수정된  $R^2 = .239$ )

<표10> <기사 B>: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eta_p^2$
수정 모형	167.200	14	11.943	16.407	.000	.320
절편	25.887	1	25.887	35.564	.000	.068
성별	1.261	1	1.261	1.732	.189	.004
연령	.567	1	.567	.779	.378	.002
정치성향	.022	1	.022	.030	.863	.000
인지차원태도	19.763	1	19.763	27.150	.000	.053
감정차원태도	3.983	1	3.983	5.472	.020	.011
행동차원태도	.620	1	.620	.852	.357	.002
주제관여도	18.734	1	18.734	25.737	.000	.050
정보원다양성	8.543	1	8.543	11.736	.001	.024
이해당사자반영	3.725	1	3.725	5.118	.024	.010
관점균형성	6.741	1	6.741	9.261	.002	.019
정보원다양성 *	1.688	1	1.688	2.319	.128	.005
이해당사자반영						
정보원다양성 *	.015	1	.015	.021	.886	.000
관점균형성						
이해당사자반영 *	.081	1	.081	.111	.739	.000
관점균형성						
정보원다양성 *	.632	1	.632	.868	.352	.002
이해당사자반영 *						
관점균형성						
오차	354.494	487	.728			
합계	8189.198	502				
수정 합계	521.694	501				

a.  $R^2 = .320$  (수정된  $R^2 = .301$ )

<표11> <기사 C>: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eta_p^2$
수정 모형	121.011	14	8.644	15.722	.000	.311
절편	75.904	1	75.904	138.061	.000	.221
성별	3.181	1	3.181	5.786	.017	.012
연령	.012	1	.012	.023	.880	.000
정치성향	2.293	1	2.293	4.171	.042	.008
인지차원태도	1.129	1	1.129	2.053	.153	.004
감정차원태도	11.046	1	11.046	20.091	.000	.040
행동차원태도	1.013	1	1.013	1.843	.175	.004
주제관여도	34.931	1	34.931	63.537	.000	.115
정보원다양성	1.218	1	1.218	2.215	.137	.005
이해당사자반영	.729	1	.729	1.326	.250	.003
관점균형성	.031	1	.031	.056	.813	.000
정보원다양성 *	.001	1	.001	.003	.959	.000
이해당사자반영						
정보원다양성 *	.110	1	.110	.201	.654	.000
관점균형성						
이해당사자반영 *	.303	1	.303	.551	.458	.001
관점균형성						
정보원다양성 *	.389	1	.389	.708	.401	.001
이해당사자반영 *						
관점균형성						
오차	267.745	487	.550			
합계	9918.959	502				
수정 합계	388.756	501				

a.  $R^2 = .311$  (수정된  $R^2 = .291$ )



## 2.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구성요인 : <연구문제 1>

<기사 A>와 <기사 C>에서는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문제1>은 공정성 구성요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기사 B>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어떤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삼원공변량분석에서 부분 에타제곱( $\eta_p^2$ )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공정성의 세 가지 구성요인 중 정보원 다양성( $\eta_p^2 = .024$ )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관점 균형성( $\eta_p^2 = .019$ ), 이해당사자 반영( $\eta_p^2 = .010$ ) 순이었다.

하지만 <표10>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성의 구성요인보다 매체에 대한 인지차원의 태도( $\eta_p^2 = .053$ )와 주제관여도( $\eta_p^2 = .050$ )의 부분에타제곱값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문제3>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 3.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에 따른 공정성 평가 요인: <연구문제 2>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매체에 대한 태도를 중간값(*Median* = 3.80) 기준으로 이분하여 매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 $M = 4.56$ ,  $SD = .59$ )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 $M = 2.85$ ,  $SD = .76$ )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 별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매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이 해당 기사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어떤 공정성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태도에 따라 그 요인이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1>과 마찬가지로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기사 B>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기사 B>의 삼원공변량분석에서 성별, 연령, 정치성향, 행동차원의 태도는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고, 주제관여도, 감정차원의 태도, 인지차원의 태도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코딩한 실험조건을 투입하였다(0 = 정보원이 다양하지 않은 조건/ 이해당사자가 반영되지 않은 조건/ 관점이 불균형한 조건, 1 = 정보원이 다양한 조건/ 이해당사자가 반영된 조건/ 관점이 균형적인 조건).

그 결과, 해당매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은 ‘정보원 다양성’ ( $\beta = .178, p < .01$ )과 ‘관점 균형성’ ( $\beta = .149, p < .05$ )이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반영’은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표준화 계수를 통해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았을 때, 공정성 구성요인보다 주제관여도( $\beta = .226, p < .001$ )가 더 큰 영향을 미쳤고, 매체에 대한 인지차원의 태도( $\beta = .152, p < .05$ )와 감정차원의 태도( $\beta = .150, p < .05$ )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  통계량은 11.647( $p = .000$ )로 유의하고,  $R^2$ 은 0.190으로 나타났다 <표12>.

반면 해당매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분석한 결과,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 중 어떤 요인도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체에 대한 인지차원의 태도( $\beta = .449, p < .001$ )와

주제관여도( $\beta = .215, p < .001$ )였다.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  통계량은 37.685( $p = .000$ )로 유의하고,  $R^2$  은 0.235로 나타났다 <표13>.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해당매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은 기사의 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뉴스내용을 고려하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은 뉴스내용보다는 매체에 대한 태도가 평가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 측면에서는 매체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은 감정차원과 인지차원의 태도가 모두 영향을 미친 반면, 부정적인 집단은 인지차원의 태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매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의 공정성 평가 요인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상수)	1.448	.474		3.057	.002
감정차원태도	.137	.060	.150	2.293	.023
주제관여도	.151	.039	.226	3.895	.000
정보원다양성	.322	.104	.178	3.109	.002
관점균형성	.270	.104	.149	2.605	.010
인지차원태도	.214	.091	.152	2.360	.019

$R^2 = .190$ , 수정된  $R^2 = .174$ ,  $F = 11.647$ ,  $p = .000$

<표13> 매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의 공정성 평가 요인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상수)	1.466	.256		5.720	.000
인지차원태도	.384	.048	.449	8.024	.000
주제관여도	.151	.039	.215	3.839	.000

$R^2 = .235$ , 수정된  $R^2 = .229$ ,  $F = 37.685$ ,  $p = .000$

#### 4. 공정성 구성요인과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 중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문제 3>

뉴스 이용자들이 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 구성요인과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 중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기사 주제별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정치성향을 첫 번째로 투입하고, 공정성 구성요인에 대한 실험조건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두 번째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매체에 대한 인지차원, 감정차원, 행동차원의 태도를 세 번째로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기사에 대한 주제관여도를 투입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사 A>와 <기사 C>에서 공정성 구성요인은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가 투입된 세 번째 모형에서는 설명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가 공정성 구성요인보다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사 B>에서는 두 번째 모형에서 공정성 구성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세 번째 모형에서 나타난 설명량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기사 A>, <기사 C>와 마찬가지로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표준화 계수에서도 공정성 구성요인보다 인지차원의 태도, 감정차원의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주제관여도를 투입한 네 번째 모형에서는 모든 기사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은 <기사 A>에서만, 성별과 정치성향은 <기사 A>와 <기사 C>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기사 A>: 공정성 평가에 대한 위계적 회귀모형

	I		II		III		IV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별	-.046	-1.041	-.046	-1.036	-.081	-1.994*	-.101	-2.553*
연령	.169	3.779***	.170	3.785***	.129	3.146**	.097	2.410*
정치성향	-.069	-1.548	-.070	-1.563	-.085	-2.071*	-.085	-2.127*
정보원다양성			.003	.062	.018	.457	.020	.524
이해당사자반영			.039	.876	.032	.803	.050	1.275
관점균형성			.018	.414	-.001	-.014	.000	-.001
인지차원태도					.051	.750	.090	1.338
감정차원태도					.387	5.485***	.304	4.292***
행동차원태도					.011	.257	.012	.280
주제관여도							.210	5.062***
R <sup>2</sup> ( $\Delta R^2$ )	.032		.033(.002)		.217(.183)		.255(.039)	
수정된 R <sup>2</sup>	.026		.022		.202		.240	
F( $\Delta F$ )	5.401**		2.848**(.316)		15.108***(38.341***)		16.840***(25.620***)	

\*p < .05, \*\*p < .01, \*\*\*p < .001

<표15> <기사 B>: 공정성 평가에 대한 위계적 회귀모형

	I		II		III		IV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별	-.005	-.122	-.006	-.133	-.060	-1.557	-.050	-1.317
연령	.036	.793	.036	.817	.010	.251	.036	.925
정치성향	.029	.630	.025	.564	-.005	-.127	-.010	-.260
정보원다양성			.125	2.849**	.140	3.659***	.129	3.435**
이해당사자반영			.074	1.680	.079	2.054*	.086	2.281*
관점균형성			.139	3.160**	.114	2.974**	.115	3.061**
인지차원태도					.302	4.597***	.341	5.279***
감정차원태도					.222	3.277**	.151	2.247*
행동차원태도					-.036	-.881	-.042	-1.059
주제관여도							.201	5.187***
R <sup>2</sup> ( $\Delta R^2$ )	.003		.043(.041)		.278(.235)		.316(.037)	
수정된 R <sup>2</sup>	-.003		.031		.265		.302	
F( $\Delta F$ )	.419		3.715**(6.996***)		21.084***(53.460***)		22.665***(26.904***)	

\*p < .05, \*\*p < .01, \*\*\*p < .001

<표16> <기사 C>: 공정성 평가에 대한 위계적 회귀모형

	I		II		III		IV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별	.011	.242	.011	.244	-.021	-.521	-.094	-2.415*
연령	.055	1.211	.056	1.225	.013	.308	.006	.160
정치성향	-.070	-1.552	-.072	-1.579	-.093	-2.269*	-.078	-2.026*
정보원다양성			.018	.413	.034	.843	.057	1.506
이해당사자반영			.058	1.299	.046	1.151	.043	1.144
관점균형성			.018	.405	-.004	-.108	-.008	-.215
인지차원태도					.084	1.225	.097	1.500
감정차원태도					.358	5.088***	.296	4.431***
행동차원태도					.086	2.014*	.054	1.341
주제관여도							.319	8.023***
R <sup>2</sup> ( $\Delta R^2$ )	.007		.011(.004)		.219(.208)		.309(.091)	
수정된 R <sup>2</sup>	.001		-.001		.204		.295	
F( $\Delta F$ )	1.143		.911(.680)		15.301***(43.611***)		21.981***(64.369***)	

\*p < .05, \*\*\*p < .001

##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뉴스 이용자들이 언론의 공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공정성의 이론적인 구성요인들이 실제로 이용자들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학자들이 제시한 공정성의 여러 구성요인을 검토하여,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반영, 관점 균형성의 세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고, 이 요인들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또는 친정부언론과 반정부언론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언론 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의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가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에 기반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은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와 관련된 <기사 B>에서는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반영, 관점 균형성, 이 세 가지 구성요인 모두가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입시논란과 사회고발을 다룬 <기사 A>와 <기사 C>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정치 관련 기사에서만 다양한 정보원이 사용된 뉴스,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뉴스, 관점이 균형적인 뉴스에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뉴스에 노출된 사람보다 해당 뉴스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공정성 구성요인 중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원 다양성이었고, 그 다음으로 관점 균형성, 이해당사자 반영 순으로 나타났다. 단, 이 결과는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정치 관련 기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에 따라 이용자들이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해당매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공정성을 평가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매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은 감정차원과 인지차원의 태도와 주제관여도, 정보원 다양성, 관점 균형성이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은 인지차원의 태도와 주제관여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매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달리 기사의 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 구성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 측면에서도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매체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은 감정차원과 인지차원의 태도가, 부정적인 집단은 인지차원의 태도만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구성요인과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 중 공정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로 드러났다. 특히 <기사 A>와 <기사 C>에서는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와 주제관여도가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기사 B>에서는 공정성 구성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효과의 크기에서 본다면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와 주제관여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기사 A>와 <기사 C>에서는 감정차원의 태도가, <기사 B>에서는 인지차원의

태도가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와 함께 주제관여도도 공정성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매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해당 기사의 주제에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해당 기사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해당 기사가 공정성 구성요인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사 A>에서는 매체에 대한 태도와 주제관여도 이외에도 성별, 연령, 정치성향이, <기사 C>에서는 성별과 정치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2 절 연구결과의 함의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정치 관련 기사에서만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둘째, 공정성 구성요인보다는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와 주제관여도가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실험 설계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세 건의 기사를 실험처치물로 선정한 것은 기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제관여도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실험결과가 나타났는데, 기사 주제별로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했다. 정치 관련 기사에서만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매체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도 정치 관련 기사에서는 인지 차원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반면, 나머지 두 기사에서는 감정 차원의

태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련된 뉴스를 볼 때 그 뉴스의 보도방식과 내용에 대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매체에 대해서도 단지 감정적으로 좋고 싫음보다는 그 매체의 보도가 믿을 만한지, 읽을 가치가 있는지, 정치성향은 어떠한지 등 인지적인 차원에서 평가한다는 것이다. 정치와 관련된 뉴스가 언론의 공정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동안 그 논란을 경험해온 뉴스 이용자들 또한 정치뉴스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련된 뉴스를 평가할 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 관련 뉴스를 제외한 다른 뉴스에서 정보원이 다양하지 않거나, 이해당사자가 반영되지 않거나, 혹은 관점이 균형적이지 않아도 그러한 보도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뉴스에서는 이러한 구성요인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믿고, 뉴스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해석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뉴스 이용자들이 정치뉴스가 아닌 다른 뉴스를 볼 때 공정성 구성요인이 갖추어졌는지 않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뉴스 이용자들이 그러한 보도방식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그 뉴스를 평가함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해석 중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뉴스 이용자들이 뉴스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와 관련된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치뉴스가 다른 뉴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뉴스만 공정하다고 해서 언론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옳고 그름이 가

려지지 않은 갈등적인 사안에 대한 뉴스보도에서 공정성은 더욱 중요한데, 본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된 기사들은 모두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 예를 들어, <기사 C>에서 소비자시민단체는 특정 섬유유연제에서 독성이 있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양이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명확한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이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인 제조업체의 의견이 기사에 반영되어야 하고 양측의 의견이 고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뉴스 이용자들은 어쩌면 이러한 기사는 한쪽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험처치물 선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했을 때, 실제로 소비자시민단체의 주장만 제시한 기사도 여럿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보도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 사회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권력관계는 비대칭적이다. <기사 A>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대학들과 학생들의 권력관계 또한 비대칭적이다. 시민들은 어쩌면 권력관계가 비대칭적일 때 언론이 시민을 대신해서 권력자의 혐의를 고발하는 뉴스는, 그 혐의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만약 실제로 그러하다면, 언론이 그 동안 불공정하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요인동기가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뉴스 공정성 요인보다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와 주제관여도가 이 사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주장해온 공정한 언론의 기준과 실제 뉴스 사용자들의 공정성 평가 기준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용자들은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기사 주제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해당 기사가 더 공정하다고 평가했으며, 매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은 그 매체의 기사를 평가할 때 공정성 구성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부정적인 매체에 대해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많은 반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선택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사 A>에서만 연령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연령의 직접효과라기 보다는 주제관여도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사 A>에 대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기사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응답자들의 <기사 A>에 대한 주제관여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이것이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사 A>와 <기사 C>에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해당 기사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보수적인 집단의 해당 기사에 대한 주제관여도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우 보수적인 집단의 <기사 A>와 <기사 C>에 대한 주제관여도는 다른 정치성향의 집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사 B>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성향의 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주제관여도를 보였다. 즉, 매우 보수적인 집단은 정치 관련 기사를 제외한 다른 기사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정치 기사를 제외한 다른 기사에서 이들의 낮은 주제관여도가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치 관련 기사에서 정치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매우 보수적인 집단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오택섭과 박성희(2005)의 주장처럼 편향된 것은 기사가 아니라 기사를 보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 아무리 열띤 논의를 펼친다고 해도, 편향된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언론은 결코 공정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공정성 논란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각자의 편향된 관점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비판한다면, 그에 대한 논란은 진전될 수가 없으며 합의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렵다. 따라서 뉴스 이용자들의 이러한 편향된 관점은,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쟁쟁해져 돌 듯 진전을 보이지 못한 현상에 대한 하나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 또한 지금까지 언론의 공정성을 비판할 때 자신들은 ‘공정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치 관련 기사를 제외한 다른 기사에서 공정성 구성요인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언론이 공정성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용자들이 정치뉴스에 가장 민감한 만큼 언론인들도 정치뉴스를 보도할 때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다른 뉴스를 보도할 때에도 공정성 규범을 따라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향된 관점을 모두 이용자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용자들의 매체에 대한 사전태도는 언론의 행위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치성(2007)의 주장처럼 이들에 의해 관찰되고 경험된 언론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뉴스 공정성 구성요인 중 정보원 다양성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언론보도의 평균 정보원 수는 다른 나라 언론에 비해 현저히 적다. 2006년 한국 주요 일간지 기사당 평균 정보원 수는 2.23명으로 미국 <뉴욕타임스>의 9.05명, 영국 <더 타임스>의 3.74명보다 확연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한국언론 취재원 사용보고서, 2006; 이재경, 2012에서 재인용). 즉, 뉴스 이용자들은 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정보원 다양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정작 한국의 저널리즘 관행은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언론이 시민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속적으로 비판 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 자신들의 이론적 논의나 뉴스 생산자의 관점에만 치중했던 언론학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론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언론의 공정성과 실제 언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언론의 공정성은 동일하지 않으며, 시민들은 결코 그들의 기준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학자들 또한 그 동안 언론의 공정성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시민들의 관점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의 저널리즘 연구에서 등한시되어왔던 이용자 관점에서의 공정성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지속되어 온 언론의 공정성 논란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앞서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 각기 다른 주제에서 기사 세 건을 선택한 것은 주제관여도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기사 주제별로 공정성 구성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은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치 관련 기사에서만 공정성 구성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점이나, 다른 기사와는 달리 이용자들의 인지적 차원의 태도가 정치기사의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쳤던 점에 대해 가능성 있는 해석만 제시하였을 뿐,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사 주제별로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처

음부터 연구문제로 제시하고 실험을 설계한다면, 이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연구문제2>에 대한 답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성 구성요인 중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정보원 다양성, 관점균형성, 이해당사자 반영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시논란과 사회고발을 다룬 기사에서 공정성 구성요인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정치 관련 기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공정성 구성요인은 기존에 학자들이 제시한 요인 중 일부임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이용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요인이 정보원 다양성이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공정성 평가 항목 중 방향성이 달랐던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주의를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결과 분석에서 세 가지 항목을 제외시켰다. 세 가지 항목이 분석에 포함되었을 때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본 연구의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이용자 관점에서의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후속 연구의 유용한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남준·김수영(2008). 미국방송 공정성원칙 규제정책의 변천 과정과 함의. 『방송통신연구』, 67호, 113~139.
- 강명구(1989). 탈사실의 시대에 있어 뉴스공정성의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26호, 83~111.
- 강태영(2000).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 강태영(2004). 텔레비전 보도와 공정성 기준: 정치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텔레비전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정치』, 한국방송학회.
- 김민환·한진만·윤영철·원용진·임영호·손영준(2008).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김연식(2009). 방송 저널리스트의 공정성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1호, 161~186.
- 김영석(2008). 『설득 커뮤니케이션』 (2<sup>nd</sup> ed.), 서울: 나남.
- 문종대·안차수·진현승·안순태(2007). 언론 수용자의 공정성 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8호, 183~210.
- 문종대·윤영태(2004). 언론 공정성 개념의 재개념화: 언론의 자율성 논변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7호, 93~122.
- 박재영(2005). 공정성의 실천적 의미: 문화일보 2002년 대선 보도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199~226.
- 배선영·이봉규·이상우(2010). 언론 수용자의 공정성 평가가 매체 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 『방송통신연구』, 70호, 87~116.
- 백선기(1992a). 한국신문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정총리서리 폭행 사건’ 보도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

- 보』, 1호, 181~246.
- 백선기(1992b). 한국신문의 선거보도에 있어서의 ‘공정성’ : ‘14대 총선’에 대한 몇가지 제언. 『제6차 쟁점과 토론』, 한국언론학회.
- 백선기(2001). 선거방송 보도시의 쟁점과 과제 및 해결방안: 새 선거방송 보도준칙 제안을 중심으로.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방송』. 한국언론학회.
- 부경희(1995). 『TV뉴스 보도의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 손영준(2011). TV 뉴스 공정성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한국방송학보』, 25권 5호, 122~158.
- 신주형(2010). 『방송 보도의 공정성 인식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차수(2009). 언론소비자가 갖는 이슈에 대한 태도가 언론의 공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46호, 323~353.
- 오택섭·박성희(2005). 적대적 매체지각: 메시지인가 메신저인가.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135~166.
- 유종원(1995). 한국에서의 공정보도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3호, 137~164.
- 윤영철(2004). TV저널리즘의 변화와 방송의 공정성. 『전환기의 한국형 방송저널리즘』, 한국언론학회.
- 이민웅(1996). 『한국 TV 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나남.
- 이민웅·윤영철·최영재·윤태진·김경모·이준웅(2006). 『방송저널리즘과 공정성 위기』, 서울: 지식산업사.
- 이민웅·이창근·김광수(1993). 보도 공정성의 한국적 기준을 위한 연구: 방송언론인과 시청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36호,

- 180~213.
- 이재경(2006). 한·미 신문의 대통령 취재관행 비교. 『언론과 사회』, 14권 4호, 37~69.
- 이재경(2012). 한국형 저널리즘 모델의 성찰. 『신문의 가치와 신뢰 회복』, 한국신문협회.
- 이준웅(2005).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론 규범 형성을 위하여. 『방송문화연구』, 17권 2호, 180~213.
- 이준웅·김경모(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방송연구』, 67호, 9~44.
- 이창현(2004). 방송의 공정성 실현방안: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기능. 제 16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 전문가 토론회.
- 이창현(2008).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분석: <PD수첩>과 촛불시위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67호, 45~68.
- 임태섭(1993). 텔레비전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담론분석. 『언론과 사회』, 1호, 67~109.
- 최민재·김재영(2008).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권 4호, 667~701.
- 최영재(2004). 언론 공정성의 구성과 실천. 『전환기의 한국형 방송저널리즘』, 한국언론학회.
- 황치성(2007). 갈등 이슈에 대한 개인 의견과 특정 신문에 대한 태도가 기사 편향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308~327.

- Arpan, L. M. & Raney, A. A. (2003).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news source and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2), 265~281.
- BBC(2004). *The BBC's journalism after Hutton: The report of the Neil report team*.  
Available: [http://www.bbc.co.uk/bbctrust/our\\_work/editorial\\_standards/impartiality/safeguarding\\_impartiality.html](http://www.bbc.co.uk/bbctrust/our_work/editorial_standards/impartiality/safeguarding_impartiality.html)
- BBC (2007). *From seesaw to wagon wheel: Safeguarding impartiality in the 21<sup>st</sup> century*.  
Available: [http://www.bbc.co.uk/bbctrust/our\\_work/editorial\\_standards/impartiality/safeguarding\\_impartiality.html](http://www.bbc.co.uk/bbctrust/our_work/editorial_standards/impartiality/safeguarding_impartiality.html)
- BBC (2010). *Editorial guideline*.  
Available: [http://www.bbc.co.uk/bbctrust/our\\_work/editorial\\_standards/editorial\\_guidelines.html](http://www.bbc.co.uk/bbctrust/our_work/editorial_standards/editorial_guidelines.html)
- Benett, W. (2009).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8<sup>th</sup> ed).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유나영 역. 『뉴스, 허깨비를 쫓는 정치』. 서울: 책보세.
- Choi, J., Yang, M. & Chang, J.(2009). Elaboration of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The roles of involvement, media skepticism, congruency of perceived media influence, and perceived opinion climate. *Communication Research*, 36(1), 54~75.
- Coe, K., Tewksbury, D., Bond, B. J., Drogos, K. L., Porter, R. W., Yahn, A. & Zhang, Y.(2003). Hostile news: partisan use and perceptions of cable news programm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8, 201~219.
- D'Alessio, D.(2003).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readers' perceptions

- of media bia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2), 282~294.
- Fico, F. & Cote, W.(1999). Fairness and balance i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ewspaper stories on the 1996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1), 124~137.
- Giner-Sorolla, R. & Chaiken, S.(1994). The causes of hostile media judg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165~180.
- Gunther, A. C. & Chia, S. C.(2001). Predicting pluralistic ignorance: the hostile media perception and its consequenc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4), 688~701.
- Gunther, A. C. & Liebhart, J. L.(2006). Broad reach or biased source? Decomposing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56, 449~466.
- Gunther, A. C., Miller, N. & Liebhart, J. L.(2009). Assimilation and contrast in a test of the hostile media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36(6), 747~764.
- Gunther, A. C. & Schmitt, K.(2004). Mapping boundaries of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54(1), 55~70.
- Hiaman, R. J.(1999). *Best practices for newspaper journalists*. The Freedom Forum.
- Krattenmaker, T. G. & Powe, L. A.(1985). The fairness doctrine today: a constitutional curiosity and an impossible dream. *Duke Law Journal*, 151, 151~176.
- Lacy, S., Fico, F. & Simon, F.(1991). Fairness and balance in the prestige press. *Journalism Quarterly*, 68(3), 363~370.

- McQuail, D.(1986). From bias to objectivity and back, In T. McCormack(Ed.). *Studies in communications: A research manual*, Vol.3 (pp. 1~36). Greenwich, Connecticut: JAI Press Inc.
- Petty, R. E.(1987). Information utility and the multiple source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2), 260~268.
- Petty, R. E. & Wegener, D. T.(1998). Attitude change: Multiple roles for persuasion variables, In Gilbert, D., Fiske, S. & Lindzey, G.(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sup>th</sup> ed., pp. 323~390). New York: McGraw-Hill.
- Schmitt, K. M., Gunther, A. C. & Liebhart, J. L.(2004). Why partisans see mass media as biased. *Communication Research*, 31, 623~641.
- Schudson, M.(2001). The objectivity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2(2), 149~170.
- Turner, J.(2007). The messenger overwhelming the message: Ideological cues and perceptions of bias in television news. *Political Behavior*, 29, 441~464.
- Vallone, R., Ross, L. & Lepper, M.(1985).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perception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577~585.
- Westerstahl, J.(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Communication Research*, 10(3), 403~424.

## [부록 1: 실험처치물]

### <기사 A-A>

#### 서울 사립대들 입학전형 변경 논란

학생들 “너무 혼란스럽다” … 대학쪽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교 3학년 김양(18)은 최근 진학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대입 전형계획을 보다가 고민에 빠졌다. 김양은 지난 3월 3개 대학이 주최하는 입시설명회를 모두 참석해 전형계획을 듣고, 그에 따라 지원 계획을 짜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3개 대학은 기존 전형을 없애거나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학생부 등의 반영 비율을 바꾸는 등 두달 사이에 전형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입시전형이 바뀌다 보면 준비하는 수험생 처지에선 너무 당혹스럽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입시가 더더욱 정보력 싸움이 되고,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서울 강남 등의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수시나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물어본다고 들었어요.”

고3 담임이나 진학담당 교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중앙고등학교 진학정보부장 교사는 “지난해에는 이맘때면 이미 구체적인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교실에 게시했는데, 올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많고 여러 가지 변경된 대학도 있어서 교사들이 방향 설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전형계획 변경은 전형을 더 좋게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이재원 입학처장은 “대입 전형계획 변경은 전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자체 연구를 거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더 많이 바꾸려고 계획을 짜고 3월 입시설명회에서 그런 취지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때문에 조금밖에 바꾸지 못했다” 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의 한 관계자도 “학생들 입장에서 자주 변경되는 입시전형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수시 지원 가능 횟수가 6회로 제한되면서 대학들 입장에서는 자체 연구와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뽑기 위해 전형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 <기사 A-B>

### 서울 사립대들 입학전형 변경 논란

학생들 “너무 혼란스럽다” … 대학쪽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교 3학년 김양(18)은 최근 진학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대입 전형계획을 보다가 고민에 빠졌다. 김양은 지난 3월 3개 대학이 주최하는 입시설명회를 모두 참석해 전형계획을 듣고, 그에 따라 지원 계획을 짜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3개 대학은 기존 전형을 없애거나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학생부 등의 반영 비율을 바꾸는 등 두달 사이에 전형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입시전형이 바뀌다 보면 준비하는 수험생 처지에선 너무 당혹스럽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입시가 더더욱 정보력 싸움이 되고,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서울 강남 등의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반의 한 친구는 대학에서 계획에 없던 영어시험 점수를 요구해와 황당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수시나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물어본다고 들었어요.”

고3 담임이나 진학담당 교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중앙고등학교 진학정보부장 교사는 “지난해에는 이맘때면 이미 구체적인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교실에 게시했는데, 올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많고 여러 가지 변경된 대학도 있어서 교사들이 방향 설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이 갑자기 전형을 변경하면서 중하위권 대학들의 학생 유치에 휘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경우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무조건 점수나 수준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혔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전형계획 변경은 전형을 더 좋게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이재원 입학처장은 “대입 전형계획 변경은 전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자체 연구를 거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의 한 관계자도 “대학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형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기사 A-C>

### 서울 사립대들 입학전형 변경 논란

“너무 혼란스럽다” ...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교 3학년 김양(18)은 최근 진학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대입 전형계획을 보다가 고민에 빠졌다. 김양은 지난 3월 3개 대학이 주최하는 입시설명회를 모두 참석해 전형계획을 듣고, 그에 따라 지원 계획을 짜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3개 대학은 기존 전형을 없애거나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학생부 등의 반영 비율을 바꾸는 등 두달 사이에 전형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입시전형이 바뀌다 보면 준비하는 수험생 처지에선 너무 당혹스럽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입시가 더더욱 정보력 싸움이 되고,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서울 강남 등의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수시나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물어본다고 들었어요.”

고3 담임이나 진학담당 교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중앙고등학교 진학정보부장 교사는 “지난해에는 이맘때면 이미 구체적인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교실에 게시했는데, 올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많고 여러 가지 변경된 대학도 있어서 교사들이 방향 설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의 전형계획 변경은 입시전형을 더 좋게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다. 입시전문가 이영덕 대성학력연구소장은 “대입 전형계획 변경은 전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대학들이 자체 연구를 거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들이 더 많이 바꾸려고 계획을 짜고 3월 입시설명회에서 그런 취지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때문에 조금밖에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의 한 관계자도 “학생들 입장에서 자주 변경되는 입시전형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수시 지원 가능 횟수가 6회로 제한되면서 대학들 입장에서는 자체 연구와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뽑기 위해 전형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기사 A-D>

### 서울 사립대들 입학전형 변경 논란

“너무 혼란스럽다” ...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교 3학년 김양(18)은 최근 진학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대입 전형계획을 보다가 고민에 빠졌다. 김양은 지난 3월 3개 대학이 주최하는 입시설명회를 모두 참석해 전형계획을 듣고, 그에 따라 지원 계획을 짜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3개 대학은 기존 전형을 없애거나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학생부 등의 반영 비율을 바꾸는 등 두달 사이에 전형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입시전형이 바뀌다 보면 준비하는 수험생 처지에선 너무 당혹스럽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입시가 더더욱 정보력 싸움이 되고,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서울 강남 등의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반의 한 친구는 대학에서 계획에 없던 영어시험 점수를 요구해와 황당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수시나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물어본다고 들었어요.”

고3 담임이나 진학담당 교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중앙고등학교 진학정보부장 교사는 “지난해에는 이맘때면 이미 구체적인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교실에 게시했는데, 올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많고 여러 가지 변경된 대학도 있어서 교사들이 방향 설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이 갑자기 전형을 변경하면서 중하위권 대학들의 학생 유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경우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무조건 점수나 수준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혔다.

이에 대해, 대학들의 전형계획 변경은 전형을 더 좋게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다. 입시전문가 이영덕 대성학력연구소장은 “대입 전형계획 변경은 전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대학들의 자체 연구를 거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의 한 관계자도 “대학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형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기사 A-E>

### 서울 사립대들 입학전형 변경 논란

학생들 “너무 혼란스럽다” ... 대학쪽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교 3학년 김양(18)은 최근 진학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대입 전형계획을 보다가 고민에 빠졌다. 김양은 지난 3월 3개 대학이 주최하는 입시설명회를 모두 참석해 전형계획을 듣고, 그에 따라 지원 계획을 짜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3개 대학은 기존 전형을 없애거나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학생부 등의 반영 비율을 바꾸는 등 두달 사이에 전형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입시전형이 바뀌다 보면 준비하는 수험생 처지에선 너무 당혹스럽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입시가 더더욱 정보력 싸움이 되고, 부모의 도움이 많이 받는 서울 강남 등의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수시나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물어본다고 들었어요.”

김양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진학담당 교사들과 수 차례 상담도 해봤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이맘때면 이미 구체적인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교실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많고 여러 가지 변경된 대학도 있어서 선생님들도 입시 상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전형계획 변경은 전형을 더 좋게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이재원 입학처장은 “대입 전형계획 변경은 전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자체 연구를 거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더 많이 바꾸려고 계획을 짜고 3월 입시설명회에서 그런 취지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때문에 조금밖에 바꾸지 못했다” 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 입장에서 자주 변경되는 입시전형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수시 지원 가능 횟수가 6회로 제한되면서 대학들 입장에서는 자체 연구와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뽑기 위해 전형계획을 변경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 <기사 A-F>

### 서울 사립대들 입학전형 변경 논란

학생들 “너무 혼란스럽다” ... 대학쪽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교 3학년 김양(18)은 최근 진학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대입 전형계획을 보다가 고민에 빠졌다. 김양은 지난 3월 3개 대학이 주최하는 입시설명회를 모두 참석해 전형계획을 듣고, 그에 따라 지원 계획을 짜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3개 대학은 기존 전형을 없애거나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학생부 등의 반영 비율을 바꾸는 등 두달 사이에 전형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입시전형이 바뀌다 보면 준비하는 수험생 처지에선 너무 당혹스럽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입시가 더더욱 정보력 싸움이 되고,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서울 강남 등의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반의 한 친구는 대학에서 계획에 없던 영어시험 점수를 요구해와 황당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수시나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물어본다고 들었어요.”

김양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진학담당 교사들과 수 차례 상담도 해봤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이맘때면 이미 구체적인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교실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많고 여러 가지 변경된 대학도 있어서 선생님들도 입시 상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고 답했다.

이러다 보니 수능을 준비해야 할 수험생들 사이에선 정작 입시제도를 공부하고 있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 김양은 “고3인 저희들은 수능 공부를 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대학의 입시전형까지 따로 공부해야 하다니 공부할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입시준비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전형계획 변경은 전형을 더 좋게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이재원 입학처장은 “대입 전형계획 변경은 전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자체 연구를 거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 <기사 A-G>

### 서울 사립대들 입학전형 변경 논란

“너무 혼란스럽다” …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교 3학년 김양(18)은 최근 진학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대입 전형계획을 보다가 고민에 빠졌다. 김양은 지난 3월 3개 대학이 주최하는 입시설명회를 모두 참석해 전형계획을 듣고, 그에 따라 지원 계획을 짜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3개 대학은 기존 전형을 없애거나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학생부 등의 반영 비율을 바꾸는 등 두달 사이에 전형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입시전형이 바뀌다 보면 준비하는 수험생 처지에선 너무 당혹스럽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입시가 더더욱 정보력 싸움이 되고,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서울 강남 등의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수시나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물어본다고 들었어요.”

김양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진학담당 교사들과 수 차례 상담도 해봤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이맘때면 이미 구체적인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교실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많고 여러 가지 변경된 대학도 있어서 선생님들도 입시 상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고 답했다.

반면 대학들의 입학전형 변경이 전형을 더 좋게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김양은 “대학 측에서는 입시 전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자체 연구를 거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입시 전형이 변경된 것이라고 하더라” 며, “지난 3월 참석한 입시설명회에서 대학들이 그런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더 많이 바꾸려고 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때문에 처음 계획만큼 바꾸지는 못한 것 같다” 고 말했다.

김양은 “우리들 입장에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수시 지원 가능 횟수가 6회로 제한되면서 대학들 입장에서는 자체 연구와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형계획을 변경한 것 같기도 하다” 고 덧붙였다.

## <기사 A-H>

### 서울 사립대들 입학전형 변경 논란

“너무 혼란스럽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교 3학년 김양(18)은 최근 진학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대입 전형계획을 보다가 고민에 빠졌다. 김양은 지난 3월 3개 대학이 주최하는 입시설명회를 모두 참석해 전형계획을 듣고, 그에 따라 지원 계획을 짜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3개 대학은 기존 전형을 없애거나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학생부 등의 반영 비율을 바꾸는 등 두달 사이에 전형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입시전형이 바뀌다 보면 준비하는 수험생 처지에선 너무 당혹스럽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입시가 더더욱 정보력 싸움이 되고, 부모의 도움이 많이 받는 서울 강남 등의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반의 한 친구는 대학에서 계획에 없던 영어시험 점수를 요구해와 황당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수시나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물어본다고 들었어요. 저도 입시 컨설팅이라도 받아볼까 고민도 해봤어요”

김양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진학담당 교사들과 수 차례 상담도 해봤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이맘때면 이미 구체적인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교실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많고 여러 가지 변경된 대학도 있어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입시 상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고 답했다.

이러다 보니 수능을 준비해야 할 수험생들 사이에선 정작 입시제도를 공부하고 있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 김양은 “고3인 저희들은 수능 공부를 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대학의 입시전형까지 따로 공부해야 하다니 공부할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입시준비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며 “입시전형을 봐도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대학들이 입시전형을 워낙 자주 바꾸다 보니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더 불안하고 답답하다” 고 하소연했다.

## <기사 B-A>

### 안철수 후보, 박사논문 표절 의혹

MBC “안철수 박사논문 표절” … 安 “사실 아니다”

지난 1일 문화방송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안 후보 측이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문화방송은 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안 후보의 1991년 서울대 의학박사 학위논문과 1989년 같은 학과 서인석 교수의 의학박사 학위논문을 비교하면서 안 후보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가 1990년 서울대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이 안 후보보다 2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서인석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과 인용 출처 표기 없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유도식을 서 교수 논문에서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며 “이런 식의 표절로 볼 수 있는 서술은 3페이지에 걸쳐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해 “안 후보 박사논문에서 나타난 볼츠만 공식의 오류도 표절의혹이 제기된 2년 전 논문의 오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서 서 모 교수가 논문에 인용한 ‘볼츠만 곡선’ 공식에 대괄호가 하나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안 후보 논문에서도 같은 공식에 대괄호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거듭 논문표절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은 왜곡, 거짓 내용”이라며 “안 후보가 서 교수의 논문을 거의 복사수준으로 베꼈다고 지적했는데, ‘볼츠만 곡선 유도식’은 두 논문에서 필수적인 연구의 도구일 뿐 동일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교수의 논문과 동일한 오류가 한 부분에 나타난다고 해서 같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자연현상의 해석에 뉴턴의 원리를 적용할 때마다 그의 저서인 프린키피아를 인용하지 않듯, 볼츠만의 원리를 적용할 때 인용문을 달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고영규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두 논문을 비교해 봤는데 볼츠만의 방정식은 19세기 때의 과학적 이론으로, 이런 경우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를 붙이지 않는다”며 “또 두 개의 논문은 방정식만 같지 기술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말했다.

## <기사 B-B>

### 안철수 후보, 박사논문 표절 의혹

MBC “안철수 박사논문 표절” … 安 “사실 아니다”

지난 1일 문화방송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안 후보 측이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문화방송은 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안 후보의 1991년 서울대 의학박사 학위논문과 1989년 같은 학과 서인석 교수의 의학박사 학위논문을 비교하면서 안 후보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가 1990년 서울대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과 안 후보보다 2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서인석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교한 결과, 서 교수 박사논문 20페이지와 안 후보 박사논문 14페이지에서 안철수 후보가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서 교수가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을 거의 옮겨쓰다시피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 교수 논문 22페이지와 안 후보 논문 17페이지도 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유도식을 서 교수 논문에서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며 “이런 식의 표절로 볼 수 있는 서술은 3페이지에 걸쳐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해 “안 후보 박사논문에서 나타난 볼츠만 공식의 오류도 표절의혹이 제기된 2년 전 논문의 오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서 서 모 교수가 논문에 인용한 ‘볼츠만 곡선’ 공식에 대괄호가 하나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안 후보 논문에서도 같은 공식에 대괄호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거듭 논문표절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의학박사 학위는 사실상 안철수 후보 경력의 발판이기도 하다”며 “안후보가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이번 대선가도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은 왜곡, 거짓 내용”이라며 “안 후보가 서 교수의 논문을 거의 복사수준으로 베꼈다고 지적했는데, ‘볼츠만 곡선 유도식’은 두 논문에서 필수적인 연구의 도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고영규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두 논문을 비교해 봤는데 볼츠만의 방정식은 19세기 때의 과학적 이론으로, 이런 경우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를 붙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기사 B-C>

### 안철수 후보, 박사논문 표절 의혹

“안철수 박사 논문 표절” … “사실 아니다”

지난 1일 문화방송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문화방송은 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안 후보의 1991년 서울대 의학박사 학위논문과 1989년 같은 학과 서인석 교수의 의학박사 학위논문을 비교하면서 안 후보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가 1990년 서울대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이 안 후보보다 2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서인석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과 인용 출처 표기 없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유도식을 서 교수 논문에서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며 “이런 식의 표절로 볼 수 있는 서술은 3페이지에 걸쳐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해 “안 후보 박사논문에서 나타난 볼츠만 공식의 오류도 표절의혹이 제기된 2년 전 논문의 오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서 서 모 교수가 논문에 인용한 ‘볼츠만 곡선’ 공식에 대괄호가 하나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안 후보 논문에서도 같은 공식에 대괄호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거듭 논문표절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MBC 보도에서 ‘안 후보가 베꼈다’는 ‘볼츠만 곡선 유도식’은 두 논문에서 필수적인 연구의 도구”라며 “MBC의 보도내용은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후보의 논문에서 서 교수의 논문과 동일한 오류가 한 부분에 나타난다고 해서 두 논문이 같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연현상의 해석에 뉴턴의 원리를 적용할 때마다 그의 저서인 프린키피아를 인용하지 않듯, 볼츠만의 원리를 적용할 때 인용문을 달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고영규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두 논문을 비교해 봤는데 볼츠만의 방정식은 19세기 때의 과학적 이론으로, 이런 경우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를 붙이지 않는다”며 “또 두 개의 논문은 방정식만 같지 기술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말했다.

## <기사 B-D>

### 안철수 후보, 박사논문 표절 의혹

“안철수 박사 논문 표절” ... “사실 아니다”

지난 1일 문화방송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문화방송은 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안 후보의 1991년 서울대 의학박사 학위논문과 1989년 같은 학과 서인석 교수의 의학박사 학위논문을 비교하면서 안 후보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가 1990년 서울대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과 안 후보보다 2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서인석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교한 결과, 서 교수 박사논문 20페이지와 안 후보 박사논문 14페이지에서 안철수 후보가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서 교수가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을 거의 옮겨쓰다시피 했다” 보도했다.

이어 “서 교수 논문 22페이지와 안 후보 논문 17페이지도 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유도식을 서 교수 논문에서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며 “이런 식의 표절로 볼 수 있는 서술은 3페이지에 걸쳐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해 “안 후보 박사논문에서 나타난 볼츠만 공식의 오류도 표절의혹이 제기된 2년 전 논문의 오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서 서 모 교수가 논문에 인용한 ‘볼츠만 곡선’ 공식에 대괄호가 하나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안 후보 논문에서도 같은 공식에 대괄호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거듭 논문표절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의학박사 학위는 사실상 안철수 후보 경력의 발판이기도 하다”며 “안후보가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이번 대선가도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MBC 보도에서 ‘안 후보가 베꼈다’는 ‘볼츠만 곡선 유도식’은 두 논문에서 필수적인 연구의 도구일 뿐”이라며 “MBC의 보도내용은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고영규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두 논문을 비교해 봤는데 볼츠만의 방정식은 19세기 때의 과학적 이론으로, 이런 경우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를 붙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기사 B-E>

### 안철수 후보, 박사논문 표절 의혹

MBC “안철수 박사논문 표절” … 安 “사실 아니다”

지난 1일 문화방송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안 후보 측이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문화방송은 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안 후보의 1991년 서울대 의학박사 학위논문과 1989년 같은 학과 서인석 교수의 의학박사 학위논문을 비교하면서 안 후보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가 1990년 서울대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이 안 후보보다 2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서인석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과 인용 출처 표기 없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유도식을 서 교수 논문에서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며 “이런 식의 표절로 볼 수 있는 서술은 3페이지에 걸쳐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 박사논문에서 나타난 볼츠만 공식의 오류도 표절의혹이 제기된 2년 전 논문의 오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서 서 모 교수가 논문에 인용한 ‘볼츠만 곡선’ 공식에 대괄호가 하나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안 후보 논문에서도 같은 공식에 대괄호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거듭 논문 표절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은 왜곡, 거짓 내용”이라며 “안 후보가 서 교수의 논문을 거의 복사수준으로 베꼈다고 지적했는데, ‘볼츠만 곡선 유도식’은 두 논문에서 필수적인 연구의 도구일 뿐 동일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교수의 논문과 동일한 오류가 한 부분에 나타난다고 해서 같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자연현상의 해석에 뉴턴의 원리를 적용할 때마다 그의 저서인 프린키피아를 인용하지 않듯, 볼츠만의 원리를 적용할 때 인용문을 달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후보 측은 “두 논문을 비교해 봤는데 볼츠만의 방정식은 19세기 때의 과학적 이론으로, 이런 경우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를 붙이지 않는다”며 “또 두 개의 논문은 방정식만 같지 기술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말했다.

## <기사 B-F>

### 안철수 후보, 박사논문 표절 의혹

MBC “안철수 박사논문 표절” … 安 “사실 아니다”

지난 1일 문화방송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안 후보 측이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문화방송은 1일 ‘뉴스데스크’ 를 통해 안 후보의 1991년 서울대 의학박사 학위논문과 1989년 같은 학과 서인석 교수의 의학박사 학위논문을 비교하면서 안 후보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가 1990년 서울대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과 안 후보보다 2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서인석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교한 결과, 서 교수 박사논문 20페이지와 안 후보 박사논문 14페이지에서 안철수 후보가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서 교수가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을 거의 옮겨쓰다시피 했다” 고 보도했다.

이어 “서 교수 논문 22페이지와 안 후보 논문 17페이지도 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유도식을 서 교수 논문에서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 며 “이런 식의 표절로 볼 수 있는 서술은 3페이지에 걸쳐 계속됐다” 고 덧붙였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 박사논문에서 나타난 볼츠만 공식의 오류도 표절의혹이 제기된 2년 전 논문의 오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앞서 서 모 교수가 논문에 인용한 ‘볼츠만 곡선’ 공식에 대괄호가 하나 빠져있는데, 공공로게도 안 후보 논문에서도 같은 공식에 대괄호가 빠져 있다” 고 주장하며 거듭 논문 표절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의학박사 학위는 사실상 안철수 후보 경력의 발판이기도 하다” 며 “안후보가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이번 대선가도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은 왜곡, 거짓 내용” 이라며 “안 후보가 서 교수의 논문을 거의 복사수준으로 베꼈다고 지적했는데, ‘볼츠만 곡선 유도식’ 은 두 논문에서 필수적인 연구의 도구일 뿐” 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 후보 측은 “두 논문을 비교해 봤는데 볼츠만의 방정식은 19세기 때의 과학적 이론으로, 이런 경우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를 붙이지 않는다” 고 말했다.

## <기사 B-G>

### 안철수 후보, 박사논문 표절 의혹

“안철수 박사 논문 표절” ... “사실 아니다”

지난 1일 문화방송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문화방송은 1일 ‘뉴스데스크’ 를 통해 안 후보의 1991년 서울대 의학박사 학위논문과 1989년 같은 학과 서인석 교수의 의학박사 학위논문을 비교하면서 안 후보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가 1990년 서울대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이 안 후보보다 2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서인석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과 인용 출처 표기 없이 거의 동일하다” 고 보도했다. 이어 “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유도식을 서 교수 논문에서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 며 “이런 식의 표절로 볼 수 있는 서술은 3페이지에 걸쳐 계속됐다” 고 덧붙였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 박사논문에서 나타난 볼츠만 공식의 오류도 표절의혹이 제기된 2년 전 논문의 오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앞서 서 모 교수가 논문에 인용한 ‘볼츠만 곡선’ 공식에 대괄호가 하나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안 후보 논문에서도 같은 공식에 대괄호가 빠져 있다” 고 주장하며 거듭 논문 표절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볼츠만의 원리와 같은 과학이론은 논문에서 인용문을 달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주장이 있어 추후 사실 검증이 요구된다. 문화방송은 이에 대해 “자연현상의 해석에 뉴턴의 원리를 적용할 때마다 그의 저서인 프린키피아를 인용하지 않는 것처럼, 볼츠만의 방정식도 19세기 때의 과학적 이론으로 이런 경우 논문을 쓸 때 인용문을 달지 않는다고 하더라” 며 “그래서 안 후보가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을 수는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볼츠만 곡선 유도식’ 이 안 후보와 서 교수의 논문에서 필수적인 연구의 도구일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문화방송 측은 “두 논문을 비교해 봤을 때 방정식은 같았지만 기술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고 덧붙였다.

## <기사 B-H>

### 안철수 후보, 박사논문 표절 의혹

#### “안철수 박사 논문 표절”

지난 1일 문화방송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은 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안 후보의 1991년 서울대 의학박사 학위논문과 1989년 같은 학과 서인석 교수의 의학박사 학위논문을 비교하면서 안 후보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가 1990년 서울대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과 안 후보보다 2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서인석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교한 결과, 서 교수 박사논문 20페이지와 안 후보 박사논문 14페이지에서 안철수 후보가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서 교수가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을 거의 옮겨쓰다시피 했다”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서 교수의 논문 20페이지에는 “prepulse(전자극)으로 -80mV를 주었을 때… 가장 큰 전류가 활성화됐고 전자극이 저분극으로 갈수록… 외향전류의 크기는 증가했지만…” 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안 후보의 논문에도 “전자극으로 -60mV를 주었을 때… 가장 큰 전류가 활성화됐으며 저분극의 전자극을 줄수록… 전류의 크기는 증가했지만…” 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이어 “서 교수 논문 22페이지와 안 후보 논문 17페이지도 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유도식을 서 교수 논문에서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며 “이런 식의 표절로 볼 수 있는 서술은 3페이지에 걸쳐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 박사논문에서 나타난 볼츠만 공식의 오류도 표절의혹이 제기된 2년 전 논문의 오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서 서 모 교수가 논문에 인용한 ‘볼츠만 곡선’ 공식에 대괄호가 하나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안 후보 논문에서도 같은 공식에 대괄호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거듭 논문 표절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의학박사 학위는 사실상 안철수 후보 경력의 발판이기도 하다”며 “안 후보가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이번 대선가도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 <기사 C-A>

### 수입 섬유유연제 유독물질 검출 논란

소시모 “다우니서 유독물질 검출” … 한국피앤지 “인체에 무해”

한국피앤지의 섬유유연제 ‘다우니’ 제품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소시모)은 섬유유연제의 성분 표시 실태 조사 및 방부제 성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섬유유연제의 조사 대상인 10개 제품 중 방부제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제품은 4개였고 이중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베트남산) 제품에서 글루타알데히드가 kg당 98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글루타알데히드는 강력한 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 중지를 촉구했다.

글루타알데히드는 모든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과 어지럼, 그리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과 임영욱 교수는 “글루타알데히드는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주거나 신장독성도 있고, 갑상선에도 일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동물실험 결과 밝혀져 있다”고 글루타알데히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피앤지 측은 “조사결과가 과장됐다”며 “다우니는 엄격한 기준에 따른 임상실험을 마친 제품”이라며 반박했다. 회사 측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글루타알데히드는 농도가 25% 이상이어야 유독물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검출된 수치는 0.0098%에 불과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피앤지 측은 “생활용품은 개봉 후 사용하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부제를 첨가하며, 얼굴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에도 글루타알데히드가 0.1%까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환경부에 확인 결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글루타알데히드가 25% 이상 사용될 경우만 유독물로 지정하고 사업자 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환경부 화학물질관리과 담당자는 “독성이 높은 물질은 1%만 넘어도 제재 대상이지만, 글루타알데히드는 25%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기사 C-B>

### 수입 섬유유연제 유독물질 검출 논란

소시모 “다우니서 유독물질 검출” ... 한국피앤지 “인체에 무해”

한국피앤지의 섬유유연제 ‘다우니’ 제품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소시모)은 섬유유연제의 성분 표시 실태 조사 및 방부제 성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섬유유연제의 조사 대상인 10개 제품 중 방부제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제품은 4개였고 이중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베트남산) 제품에서 글루타알데히드가 kg당 98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글루타알데히드는 강력한 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 중지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만 유독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시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생산·수입된 것으로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에는 글루타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한국피앤지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글루타알데히드가 포함된 제품의 국내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루타알데히드는 모든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과 어지럼, 그리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과 임영욱 교수는 “글루타알데히드는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주거나 신장독성도 있고, 갑상선에도 일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동물실험 결과 밝혀져 있다”고 글루타알데히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피앤지 측은 “다우니는 엄격한 기준에 따른 임상실험을 마친 제품”이며, “이번에 검출된 수치는 소량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데 조사결과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환경부에 확인 결과, 환경부 화학물질관리과 담당자는 “독성이 높은 물질은 1%만 넘어도 제재 대상이지만, 글루타알데히드는 25%까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사 C-C>

### 수입 섬유유연제 유독물질 검출 논란

“다우니서 유독물질 검출” … “인체에 무해”

한국피앤지의 섬유유연제 ‘다우니’ 제품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소시모)은 섬유유연제의 성분 표시 실태 조사 및 방부제 성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섬유유연제의 조사 대상인 10개 제품 중 방부제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제품은 4개였고 이중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베트남산) 제품에서 글루타알데히드가 kg당 98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글루타알데히드는 강력한 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 중지를 촉구했다.

글루타알데히드는 모든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과 어지럼, 그리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과 임영욱 교수는 “글루타알데히드는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주거나 신장독성도 있고, 갑상선에도 일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동물실험 결과 밝혀져 있다”고 글루타알데히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다우니’에서 검출된 글루타알데히드는 0.0098%로 소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환경부에 확인 결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글루타알데히드가 25% 이상 사용될 경우만 유독물로 지정하고 사업자 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환경부 화학물질관리과 담당자는 “독성이 높은 물질은 1%만 넘어도 제재 대상이지만, 글루타알데히드는 25%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우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유독성 물질 검출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아 한쪽 입장만 듣고 철수할 수 없어 매장에서 판매 중”이라며 “생활용품은 개봉 후 사용하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부제를 첨가하며, 얼굴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에도 글루타알데히드가 0.1%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C-D>

### 수입 섬유유연제 유독물질 검출 논란

#### “다우니서 유독물질 검출” … “인체에 무해”

한국피앤지의 섬유유연제 ‘다우니’ 제품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소시모)은 섬유유연제의 성분 표시 실태 조사 및 방부제 성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섬유유연제의 조사 대상인 10개 제품 중 방부제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제품은 4개였고 이중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베트남산) 제품에서 글루타알데히드가 kg당 98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글루타알데히드는 강력한 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 중지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만 유독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시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생산·수입된 것으로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에는 글루타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한국피앤지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글루타알데히드가 포함된 제품의 국내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루타알데히드는 모든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과 어지럼, 그리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과 임영욱 교수는 “글루타알데히드는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주거나 신장독성도 있고, 갑상선에도 일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동물실험 결과 밝혀져 있다”고 글루타알데히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다우니’에서 검출된 글루타알데히드는 소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부 화학물질관리과 담당자는 “독성이 높은 물질은 1%만 넘어도 제재 대상이지만, 글루타알데히드는 25%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우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이마트 관계자는 “유독성 물질 검출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아 매장에서 판매 중”이라며 “이번에 검출된 수치는 소량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 <기사 C-E>

### 수입 섬유유연제 유독물질 검출 논란

소시모 “다우니서 유독물질 검출” ... 한국피앤지 “인체에 무해”

한국피앤지의 섬유유연제 ‘다우니’ 제품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소시모)은 섬유유연제의 성분 표시 실태 조사 및 방부제 성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섬유유연제의 조사 대상인 10개 제품 중 방부제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제품은 4개였고 이중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베트남산) 제품에서 글루타알데히드가 kg당 98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글루타알데히드는 강력한 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 중지를 촉구했다.

글루타알데히드는 모든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과 어지럼, 그리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소시모는 “글루타알데히드는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주거나 신장독성도 있고, 갑상선에도 일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동물실험 결과 밝혀져 있다”고 글루타알데히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피앤지 측은 “조사결과가 과장됐다”며 “다우니는 엄격한 기준에 따른 임상실험을 마친 제품”이라며 반박했다. 회사 측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글루타알데히드는 농도가 25% 이상이어야 유독물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검출된 수치는 0.0098%에 불과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국피앤지 측은 “생활용품은 개봉 후 사용하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부제를 첨가하며, 얼굴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에도 글루타알데히드가 0.1%까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글루타알데히드가 25% 이상 사용될 경우만 유독물로 지정하고 사업자 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성이 높은 물질은 1%만 넘어도 제재 대상이지만, 글루타알데히드는 25%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우니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 <기사 C-F>

### 수입 섬유유연제 유독물질 검출 논란

소시모 “다우니서 유독물질 검출” ... 한국피앤지 “인체에 무해”

한국피앤지의 섬유유연제 ‘다우니’ 제품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소시모)은 섬유유연제의 성분 표시 실태 조사 및 방부제 성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섬유유연제의 조사 대상인 10개 제품 중 방부제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제품은 4개였고 이중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베트남산) 제품에서 글루타알데히드가 kg당 98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글루타알데히드는 강력한 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 중지를 촉구했다.

글루타알데히드는 모든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과 어지럼, 그리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소시모는 “글루타알데히드는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주거나 신장독성도 있고, 갑상선에도 일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동물실험 결과 밝혀져 있다”고 글루타알데히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만 유독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시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생산·수입된 것으로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에는 글루타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한국피앤지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글루타알데히드가 포함된 제품의 국내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피앤지 측은 “다우니는 엄격한 기준에 따른 임상실험을 마친 제품”이며, “이번에 검출된 수치는 소량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데 조사결과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독성이 높은 물질은 1%만 넘어도 제재 대상이지만, 글루타알데히드는 25%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기사 C-G>

### 수입 섬유유연제 유독물질 검출 논란

“다우니서 유독물질 검출” … “인체에 무해”

한국피앤지의 섬유유연제 ‘다우니’ 제품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소시모)은 섬유유연제의 성분 표시 실태 조사 및 방부제 성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섬유유연제의 조사 대상인 10개 제품 중 방부제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제품은 4개였고 이중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베트남산) 제품에서 글루타알데히드가 kg당 98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글루타알데히드는 강력한 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 중지를 촉구했다.

글루타알데히드는 모든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과 어지럼, 그리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소시모는 “글루타알데히드는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주거나 신장독성도 있고, 갑상선에도 일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동물실험 결과 밝혀져 있다”고 글루타알데히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서 검출된 수치가 0.0098%로 소량에 불과해 ‘다우니’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글루타알데히드가 25% 이상 사용될 경우에만 유독물로 지정하고 사업자 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시모 관계자도 “독성이 높은 물질은 1%만 넘어도 제재 대상이지만, 글루타알데히드는 25%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시모 측은 “생활용품은 개봉 후 사용하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부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얼굴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에도 글루타알데히드가 0.1%까지 허용된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 <기사 C-H>

### 수입 섬유유연제 유독물질 검출 논란

#### “다우니서 유독물질 검출”

한국피앤지의 섬유유연제 ‘다우니’ 제품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소시모)은 섬유유연제의 성분 표시 실태 조사 및 방부제 성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섬유유연제의 조사 대상인 10개 제품 중 방부제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제품은 4개였고 이중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베트남산) 제품에서 글루타알데히드가 kg당 98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글루타알데히드는 강력한 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 중지를 촉구했다.

글루타알데히드는 모든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과 어지럼, 그리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소시모는 “글루타알데히드는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주거나 신장독성도 있고, 갑상선에도 일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동물실험 결과 밝혀져 있다”고 글루타알데히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만 유독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시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생산·수입된 것으로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에는 글루타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한국피앤지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글루타알데히드가 포함된 제품의 국내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시모 측은 “글루타알데히드는 유독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섬유유연제의 관리대상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금지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관리 소홀을 틈 타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용품에 유독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섬유유연제의 전 성분의 이름과 사용용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록 2: 설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신문기사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입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세 건의 기사를 읽고, 각 기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없는 조사이니, 기사를 읽고 생각나는 대로 바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기사를 다시 읽거나 앞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방금 보신 기사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동의한다
-------------	---	---	---	---	---	---	---	---------

기사내용이 정확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거나 소홀하게 취급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논점의 찬성과 반대를 골고루 보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뉴스가치가 있는 것을 보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광범위한 취재를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상반되는 주장은 거의 비슷한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뉴스를 보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폭넓은 정보와 견해를 고르게 보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어느 한쪽을 봐주기 식으로 편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각계각층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취급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가치를 기사에서 뒷받침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보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사의 내용에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사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동의한다
-------------	---	---	---	---	---	---	---	---------

방금 읽은 기사의 주제에 평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금 읽은 기사의 주제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선일보 기사를 읽은 집단에 해당)

\* 다음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동의한다
-------------	---	---	---	---	---	---	---	---------

조선일보의 기사는 믿을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선일보의 기사는 읽을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선일보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선일보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선일보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	진보	중도	보수	매우 보수
①	②	③	④	⑤

조선일보는 현 정부 전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보십니까?

매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우 찬성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매우 진보	진보	중도	보수	매우 보수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는 현 정부 전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매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우 찬성
①	②	③	④	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조선일보의 기사를 읽으십니까? (종이신문, 온라인, 모바일 모두 포함) 일주일에 \_\_\_\_\_ 번

**(한겨레신문 기사를 읽은 집단에 해당)**

\* 다음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동의한다
-------------	---	---	---	---	---	---	---	---------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믿을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읽을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한겨레신문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한겨레신문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한겨레신문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	진보	중도	보수	매우 보수
①	②	③	④	⑤

한겨레신문은 현 정부 전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보십니까?

매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우 찬성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매우 진보	진보	중도	보수	매우 보수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는 현 정부 전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매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우 찬성
①	②	③	④	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읽으십니까? (종이신문, 온라인, 모바일 모두 포함) 일주일에 \_\_\_\_\_ 번

**(공통질문)**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 ① 대도시
- ② 중소도시
- ③ 군·읍·면

실례지만 귀하의 택(가정)은 어느 소득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①	②	③	④	⑤

실례지만 귀택의 한 달 총수입(보너스와 이자 등 모든 수입 포함)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200만원미만	③ 200만원- 300만원미만
④ 300만원- 400만원미만	⑤ 400만원- 500만원미만	⑥ 500만원- 600만원미만
⑦ 600만원- 700만원미만	⑧ 700만원- 800만원미만	⑨ 800만원- 900만원미만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농축수산/광업	② 자영/판매업	③ 서비스직	④ 노무직
⑤ 기능직	⑥ 사무직	⑦ 전문직	⑧ 기술전문직
⑨ 경영관리직	⑩ 전업주부	⑪ 학생	⑫ 무직/퇴직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 재학
- ⑤ 대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재학 이상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불교
- ② 기독교
- ③ 천주교
- ④ 없음
- ⑤ 기타 \_\_\_\_\_

## **Abstract**

# **How the theoretical elements of fairness and the hostile media perception affect users' evaluation of fairness in news coverage**

Eun Young Mok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account for how news users assess fairness of news coverage and how the theoretical elements of fairness suggested by scholars affect users' assessment. In addition, on the basis of the hostile media perception effect, how their prior attitudes toward news media influence that assessment was examined.

In order to address these questions, 2 (source diversity: high vs. low) x 2 (reflection of interested parties: reflected vs. not reflected) x 2 (balance of perspectives: balanced vs. unbalanced) x 2 (news media: Chosun-ilbo vs. Hangeore-shinmun) between-subject experiment was conducted.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the elements of fairness differed depending on news topics. The elements of fairness had significant effect on users' assessment of fairness only as to the news report on politics. In contrast, in the news reports on education and society, prior attitudes toward the media and issue involvement were key factors affecting users'

assessment. Second, in three elements of fairnes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users' evaluation of fairness was 'source diversity.' Third, the standard for evaluating fairness varied depending on prior attitudes toward the media. Those who have an un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media did not consider the elements of fairness at all. In terms of prior attitudes toward the news media, those who are favorable were affected by both the emotional and cognitive dimensions, while those who are unfavorable were affected by the cognitive dimension. Finally, prior attitudes toward the media had greater effect on users' assessment of fairness than the elements of fairness. As a whole, prior attitudes and issue involvement were strong predictors for users' evaluation of fairness.

**Keywords: fairness of the press, source diversity, reflection of interested parties, balance of perspectives, hostile media perception, prior attitudes toward news media**

***Student Number: 2010-23003***